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24.5.27. 위촉일 기준

연번	성명	구분	주요 경력
1	정 대 화	위원장	• 現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 前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2	김 국 현	위 원	• 現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3	김 용 하	위 원	• 現 건양대학교 총장 • 前 건양대학교병원 행정원장
4	김 재 춘	위 원	• 現 영남대학교 특임부총장 • 前 교육부 차관, 한국교육개발원장
5	김 희 규	위 원	• 現 신라대학교 부총장, 교육학과 교수 • 現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위원
6	남 성 희	위 원	• 現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 現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 前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7	민 세 진	위 원	• 現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8	박 순 준	위 원	• 現 동의대학교 역사인문교양학부 교수 • 前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9	박 은 경	위 원	• 現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現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10	양 영 유	위 원	• 現 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특임교수 •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11	임 순 광	위 원	• 前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사 • 前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시간강사
12	전 은 영	위 원	• 現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 現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13	정 일 화	위 원	• 現 참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前 충남고등학교 수석교사
14	조 옥 경	위 원	• 現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 연구위원 • 現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사
15	조 윤 희	위 원	• 現 부산금성고등학교 교사 • 前 부산 덕문여자고등학교 교사
16	지 범 하	위 원	• 前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특별초빙교수 • 前 미국 킹스컬리지 경영대학장
17	채 송 화	위 원	• 現 부평공업고등학교 교사
18	채 희 율	위 원	• 現 경기대학교 경제학전공 교수 • 前 경기대학교 특임부총장
19	하 병 수	위 원	• 現 경기 호평중학교 교사
20	홍 은 주	위 원	• 現 ESG plus consulting(주) 대표 • 前 MBC 논설실 실장
21	황 윤 원	위 원	• 現 중원대학교 총장 • 前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3.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위원들간 논의한 견해임을 밝혀둠

I.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

❖ 특별위원회 구성

- 국가교육위원회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전 사전검토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제1기 특별위원회 임기가 만료('24.3.26)됨에 따라, 제28차 회의('24.4.12.)에서 제2기 특별위원회 구성분야를 논의
 - 제30차 회의('24.5.10.)를 거쳐 제2기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이 이루어졌으며,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24.5.27.부터 시작됨
- 특별위원회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부터 후보로 추천받은 안을 기반으로 국교위 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구성
 - 지방대학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①지방대학의 총장·부총장, ②중등학교 교사, ③학부모 대표, ④언론인, ⑤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원 위촉

< 표1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총 21명)

구분	성명	주요 경력	구분	성명	주요 경력
지방대학 총장·부총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前 상지대학교 총장)	분야별 전문가	김국현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김용하	건양대학교 총장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재춘	영남대학교 특임부총장		박순준	동의대학교 역사인문교양학부 교수
	김희규	신라대학교 부총장		임순광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사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조옥경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 연구위원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		지범하	前 미국 킹스컬리지 경영대학장
				채희율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등학교 교사	정일화	전 충남고등학교 수석교사	학부모 대표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윤희	부산 금성고등학교 교사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 네트워크 공동대표
	채송화	부평공업고등학교 교사	언론인	양영유	前 중앙일보 기자
	하병수	경기 호평중학교 교사		홍은주	前 MBC 논설실 실장

❖ 특별위원회 활동

운영 방향

- 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격차·균형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 내용을 검토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기초자료 마련
 - (전문가 발제) 8명의 외부전문가와 8명의 위원 등 총 16명이 발제하였으며, 대학 격차 또는 서열화와 관련한 문제점과 원인을 사회, 경제, 법·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
 - (결과보고서) 발제 내용과 위원별 의견 등을 종합하여 대학 서열화 관련 현황·원인·폐해 및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작성

< 표2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회차(일자)	발제자	논의내용 또는 발표주제
1차 (‘24.6.25.)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목표
2차 (‘24.7.23.)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대학 교육격차 현황과 과제
3차 (‘24.8.27.)	김진영 건국대 교수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4차 (‘24.9.24.)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사회 대학서열체제의 형성 배경, 폐해 및 개혁방안
	조옥경 위원	대학교육 격차와 공유·협력 대학체제
5차 (‘24.10.22.)	박순준 위원	대학 격차 현황
	양영유 위원	대학 격차, 해소냐 줄임이나
6차 (‘24.11.26.)	정일화 위원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방향 탐색을 위한 해외 대학입시제도의 개관
	정대화 위원장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관련 논의
7차 (‘24.12.18.)	홍창남 부산대 교수	고등교육체제의 전면 재구조화
	채희울 위원	대학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대학재정 확충 및 구조조정 방안
8차 (‘25.1.14.)	반상진 전북대 교수	고착화된 대학서열구조, 해결 가능한가?
	하병수 위원	대학서열체제 해소 방안과 대입제도 개편 방안
9차 (‘25.2.25.)	김종영 경희대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민세진 위원	대학격차해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10차 (‘25.3.25.)	임재홍 방통대 교수	학벌사회에 대한 법적 접근
11차 (‘25.4.22.)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	대학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할 것인가?
	김재춘 위원	대학 격차해소 정책방안 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 생각거리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12차 (‘25.5.20.)	-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관련 논의

II.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전략과 과제

우리 교육이 대전환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은 이미 국민 공통의 상식이 되었다. 과거 70~80년대 개발주의 시대의 경직된 권위주의 교육은 90년대의 5.31교육개혁을 통해서 상당히 해결되었지만,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광풍과 입시지옥이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과도한 경쟁주의 논리가 우리 교육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지금 전국을 강타하는 사교육 광풍은 공교육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공교육의 토대가 무너졌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 광풍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이미 공교육과 사교육의 회로가 다르고 각각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 별도의 폐쇄회로 채널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사교육 광풍이 자동적으로 사그라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교육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의 고착화를 초래한 힘은 입시지옥이라고 불리는 대학입시의 치열한 경쟁 상황이다. 대입 경쟁이 높을수록 입시지옥은 해결되기 어렵고, 입시지옥이 유지되는 한 사교육 광풍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공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한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입 경쟁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대입 경쟁이 완화되지 않는 한 입시지옥도, 사교육도 해결하기 어렵고 공교육의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 대입 경쟁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비롯되었다. 학벌주의 때문에 대학 진학의 열망은 매우 높는데 이 열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대학의 좁은 문이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초과 상황이 되어, 대학의 문이 넓어졌음에도 입시 경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지만 가고 싶은 대학이 적기 때문이다. 대학의 격차가 크고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좋은 대학을 향한 열망이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결론이 가능하다. 고도화된 대학의 서열 체제가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촉발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즉, 사교육 광풍, 입시 지옥, 공교육 정상화는 공교육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대학의 서열화된 구조를 해소하거나 완화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열화된 구조를 해소한다는 것은 서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열을 조장하는 대학 간 격차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학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양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학 서열화의 주된 양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에 있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 일반대와 전문대의 차이도 작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은 거의 예외 없이 비수도권 지방대학에 앞선다. 서울대는 지방국립대학에 앞서고 수도권 사립대학은 지방사립대학에 앞선다. 수도권 사립대학은 지방국립대학에 대해서도 앞선다. 그러므로 지역이 일차적인 변수가 된다. 일반대가 전문대를 앞서는 것은 불문가지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서울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에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고 대학 정책 역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 발전에 필요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지극히 미미하다. OECD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둘째, 85%에 이르는 사립대학의 난립이 대학 생태계를 교란하는 요인이다. 셋째, 정부의 대학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대학의 특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수적으로 사립대학의 육성을 방지했고 전문대학의 육성에도 실패했다.

그러므로 사교육과 입시지옥을 부추기는 대학의 서열 체제는 서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되지 않은 대학 간 격차에 있는 것이며, 이 비특성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향이다. 이것은 대학발전을 촉진하여 대학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더 많이 만들어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다. 좋은 대학이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들 대학이 분야별로 특성화된다면 서열화된 대학 체제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국립대학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발전 가능한 지방사립대학을 선별 지원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방국립대학이 발전하고 지방사립대학이 발전하면 지방 소재 학생들의 수도권 진출을 완화할 수 있고 대학입시에서 경쟁을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고등교

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최소한 OECD 평균인 GDP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지만 다른 부수적인 여건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기업체와 연구소가 대학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대학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산·학·연 협조체제를 튼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하고 대학 관련 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대학 기부금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대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반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문대학은 폴리텍과 함께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도록 육성해야 하며 직업계고와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학비감면정책을 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대학의 서열 체제를 완화하고 대학 간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대학의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학의 특성화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등 목적별 특성화, 특정한 분야와 전공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분야별·전공별 특성화, 대학의 설립 목적 등 운영 방식에 따른 운영별 특성화로 나눌 수 있다. 대학이 특성화되어 모든 대학이 나뉠대로의 장점을 보유하고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내 최고 혹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대학별 공고한 서열 체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정대화 상임위원

Ⅲ. 대학 서열화의 현황 **박순준**

1 서울대 일극주의, SKY 중심주의

❖ 서울대 일극주의

- 서울대의 예산 규모와 정부지원금(경상비 지원금)
 -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대 법인회계 자금수입 총계는 1조 1,610억 원
 -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총 6,267억 원의 대학 운영경비(“정부출연금 및 보조금”)는 서울대 자금수입 총계의 54%를 차지하고, 학생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수입(1,954억 원)의 비중(등록금 의존율)은 16.8%이며 산학협력단과 발전기금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및 기부수입”(787억 원)은 6.8%에 불과함
 - 최근 3년간 결산 기준으로,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52.7%→54%) 등록금 수입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19.2%→16.8%)
 - 서울대 일극 체제는 과거 빈곤한 시절 자원의 선택과 집종의 산물임과 동시에, 이로 인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다극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이 절실함

< 표3 > 서울대 최근 3년간 결산 내역 (단위: 억 원, %)

항	목	2023년도	비율	2022년도	비율	2021년도	비율
운영수입	등록금수입	1,954	16.8	1,893	18.5	1,858	19.2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6,267	54.0	5,203	50.8	5,089	52.7
	전입금 및 기부수입	787	6.8	744	7.3	549	5.7
	교육부대수입	1,198	10.3	1,069	10.4	925	9.6
	교육외수입	237	2.0	178	1.7	101	1.0
	기본금 환입액	130	1.1	132	1.3	0	0.0
	소계(A)	10,573	91.1	9,219	90.0	8,522	88.3
자산 및 부채수입	투자과 기타자산수입	44	0.4	44	0.4	45	0.5
	비유동부채수입	0	0.0	19	0.2	6	0.1
	소계(B)	45	0.4	63	0.6	51	0.5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기초유동자산	3,980	-	3,767	36.8	3,721	-
	기초유동부채	2,988	-	2,803	27.4	2,638	-
	소계(C)	992	8.5	964	9.4	1,083	11.2
자금수입 총계(A+B+C)		11,610	100.0	10,245	100.0	9,656	100.0

* 출처: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결산 기준 서울대 법인회계 재무제표 중 자금흐름표
** 산학협력단회계를 제외한 법인회계 기준

- 국가거점 국립대학의 예산 규모와 정부지원금을 서울대와 비교하면
 -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북대(5,704억 원)는 서울대의 49%이고, 규모가 가장 작은 제주대(1,248억 원)는 서울대의 23%에 불과함
 - 국가거점 국립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상운영비(“이전 수입”)의 비중은 세입 합계의 평균 47%로 서울대와 비교하면 7%p 낮지만, 금액으로 비교하면 “이전수입”이 가장 많은 전남대(2,675억 원)가 서울대보다 3,592억 원 적고, 가장 적은 제주대(1,248억 원)는 서울대보다 5,019억 원 적음
 - 국가거점 국립대학 9교 평균 지원금액(2,108억 원)으로 비교하면 서울대 정부지원금의 1/3에 불과함
 - 국가거점 국립대학 9교 평균 자체수입 중 등록금수입의 비중은 18%로 서울대보다 1.2%p 높음

< 표4 > 2024년 국가거점 국립대학 세입 현황 (단위: 억 원, %)

학교명	이전수입 (A)	비율	자체수입 (B)	비율	자체수입 중 등록금수입	비율	기타 (C)	비율	세입합계 (A+B+C)	비율
강원대	2,272	51.5	1,715	38.9	800	18.1	422	9.6	4,409	100.0
경북대	2,214	38.8	2,753	48.3	1,112	19.5	738	12.9	5,704	100.0
경상국립대	2,645	55.0	1,858	38.6	707	14.7	307	6.4	4,810	100.0
부산대	2,234	41.5	2,439	45.3	1,085	20.1	710	13.2	5,383	100.0
전남대	2,675	52.5	1,811	35.5	914	17.9	613	12.0	5,099	100.0
전북대	2,093	44.7	1,680	35.9	834	17.8	911	19.4	4,684	100.0
제주대	1,248	46.9	1,151	43.3	398	15.0	260	9.8	2,659	100.0
충남대	1,870	45.0	1,735	41.8	823	19.8	550	13.2	4,155	100.0
충북대	1,722	49.4	1,522	43.7	614	17.6	240	6.9	3,483	100.0
합계	18,973	47.0	16,664	41.3	7,286	18.0	4,750	11.8	40,387	100.0

*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학교명 가나다 순)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비교
 - 2023년도 서울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1조 3,212억 원= 중앙정부 1조 3,123억 원, 지자체 89억 원)은 그해 정부가 411개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한 총액(19조 8,981억 원= 중앙정부 18조 9,695억 원+ 지자체 9,286억 원)의 약 6.64%에 해당함

- 서울대 지원금(1조 3,212억 원)은 9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평균(4,558억 원)의 2.9배고, 서울대를 제외한 38개 국공립대학 평균(1,837억 원)의 7.2배에 달함
- 서울대 다음으로 많이 지원받은 경북대(5,809억 원)와 비교해도 2.3배에 해당하고, 가장 적게 지원받은 제주대(2,634억 원)와 비교하면 무려 5배에 해당함

< 표5 > 2024년 국가거점 국립대학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단위: 억 원)

학교명	중앙정부 지원액	지자체 지원액	합계
강원대	3,956	392	4,348
경북대	5,542	267	5,809
경상국립대	4,497	279	4,776
부산대	5,443	140	5,582
전남대	5,131	326	5,457
전북대	4,423	204	4,627
제주대	2,435	200	2,634
충남대	4,137	106	4,242
충북대	3,425	120	3,545
9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합계	38,988	2,032	41,021

출처: 대학재정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고등교육 재정지원 (학교명 가나다 순)

- 국가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와 비교하면
 -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 실험실습비 등을 포함함
 - 학부 재학생만이 아니라 대학원 재학생까지 포함되므로, 대학원 규모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규모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6,059만 원)는 국가거점 국립대학 평균(2,451만 원)의 2.47배이고, 서울대를 제외한 38개 국공립대학 평균(2,214만 원)의 2.74배에 해당함

< 표6 > 2024년 국가거점 국립대학 및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학교명	총 교육비(A) (단위: 억 원)	재학생수(B)* (단위: 명)	학생 1인당 교육비(A/B) (단위: 만 원)
강원대	4,891	21,760	2,248
경북대	7,298	27,587	2,645
경상국립대	4,618	20,208	2,285
부산대	7,058	27,126	2,602
전남대	6,163	23,747	2,595
전북대	4,991	21,683	2,302
제주대	2,758	11,340	2,432
충남대	5,313	22,305	2,382
충북대	3,974	16,271	2,443
9개 거점국립대학 합계	47,064	192,027	2,451
서울대를 제외한 38개 국공립대학 합계	82,347	371,954	2,214
서울대	17,611	29,065	6,059

*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국공립대)

** 재학생에는 대학원생이 포함됨(학교명 가나다 순)

- 재학생과 전임교원 규모 비교
 - 등록금은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대학 재정 규모에 차이를 초래함
 - 또한 대학 재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경쟁적으로 수주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금과 교외 연구비 등은 학생 및 교원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표7 > 2023년 국가거점 국립대학과 서울대의 재학생 및 전임교원 현황

(단위: 명, %)

학교명	재학생			전임교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A/B)	전임교원 확보율 (B/C)
	학부	대학원	합계(A)	전임교원 현 황(B)	교원 법정정 원(C)		
경북대	21,399	8,315	29,714	1,407	1,477	21.12	95.26
부산대	19,120	10,099	29,219	1,446	1,482	20.21	97.57
전남대	18,920	7,098	26,018	1,283	1,354	20.28	94.76
강원대	18,556	4,263	22,819	1,021	1,112	22.35	91.82

학교명	재학생			전임교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A/B)	전임교원 확보율 (B/C)
	학부	대학원	합계(A)	전임교원 현 황(B)	교원 법정정 원(C)		
충남대	17,349	7,160	24,509	1,050	1,222	23.34	85.92
경상국립대	17,121	3,556	20,677	1,033	1,001	20.02	103.2
전북대	17,018	5,627	22,645	1,061	1,122	21.34	94.56
충북대	13,039	4,734	17,773	776	893	22.90	86.9
제주대	9,455	2,405	11,860	647	575	18.33	112.52
9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평균	16,886	5,917	22,804	1,080	1,138	21.11	94.98
서울대	16,359	18,160	34,519	2,344	1,828	14.73	128.23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국공립대)
(※ 학부 재학생 규모 순)

- 서울대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비율은 47대 53인데 비해, 9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평균 비율은 74대 26에 그침
- 국가거점 국립대학 중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비율 차이가 큰 곳은 강원대(81대 19)와 제주대(80대 20)이고, 가장 적은 곳은 부산대(65대 35)임
- 또 서울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73명인데 비해, 9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평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1.11명임
- 이런 차이는 전임교원 확보율 격차와 연관되는데, 서울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법정기준을 훌쩍 넘은 128.23%인데 비해 9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평균은 약 95%에 그침

❖ SKY 중심주의

-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의 예산 규모를 연세대·고려대와 비교하면
 -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 16교(학부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교비회계 자금수입 총규모는 6조 3,665억 원인데, 이는 서울 전체 34개 사립대학 자금수입 합계(7조 5,717억 원)의 약 84.1%를 차지하고, 전국 156개 사립대학 자금수입 합계(19조 7,063억 원)의 32.3%를 차지함

< 표8 > 2024년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현황 (단위: 억 원, %)

학교명	등록금 수입(A)	비율	국고 보조금(B)	비율	기타 (C)	비율	자금수입 합계(A+B+C)	비율
연세대	3,482	34.9	687	6.9	5,816	58.2	9,985	100.0
고려대	3,073	43.6	511	7.2	3,471	49.2	7,055	100.0
성균관대	2,927	44.3	494	7.5	3,180	48.2	6,600	100.0
경희대	3,040	61.2	590	11.9	1,340	27.0	4,971	100.0
한양대	2,545	54.6	463	10.0	1,648	35.4	4,657	100.0
이화여대	2,079	47.8	378	8.7	1,891	43.5	4,348	100.0
중앙대	2,687	62.2	605	14.0	1,029	23.8	4,321	100.0
홍익대	1,975	57.8	418	12.2	1,025	30.0	3,418	100.0
건국대	1,691	59.0	424	14.8	749	26.2	2,864	100.0
동국대	1,551	56.7	369	13.5	815	29.8	2,735	100.0
국민대	1,562	64.6	458	19.0	396	16.4	2,416	100.0
한국외대	1,424	59.4	436	18.2	537	22.4	2,397	100.0
숭실대	1,414	59.8	360	15.2	592	25.0	2,366	100.0
세종대	1,374	65.5	356	17.0	368	17.5	2,098	100.0
숙명여대	1,051	55.8	309	16.4	522	27.7	1,881	100.0
상명대	1,024	65.9	362	23.3	166	10.7	1,552	100.0
16개 대규모 사립 대학 합계	32,899	51.7	7,221	11.3	23,545	37.0	63,665	100.0
서울 34개 사립대학 합계	39,673	52.4	9,497	12.5	26,546	35.1	75,717	100.0
전국 156개 사립대학 합계	98,838	50.2	38,748	19.7	59,478	30.2	197,063	100.0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자금계산서). (자금수입합계 순)

- 이들 대규모 사립대학 16교 중에서 연세대의 교비회계 자금수입 규모(9,985억 원)는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 자금수입 합계(6조 3,665억 원)의 약 15.7%를 차지하고, 서울 전체 사립대학(7조 5,717억 원)의 약 13.2%를 차지함
- 고려대의 교비회계 자금수입 규모(7,055억 원)는 서울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자금수입 규모(6조 3,665억 원)의 약 11.1%를 차지하고 서울 전체 사립대학(7조 5,717억 원)의 9.3%를 차지함

- 이러한 연세대·고려대의 자금수입 규모는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의 26.8%를 차지하지만,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대 법인회계 자금수입(1조 1,610억 원)의 각각 86%(연세대)와 60.1%(고려대)에 그침
-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 규모를 연세대·고려대와 비교하면
 -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전국 156개 사립대학이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은 국고보조금(3조 8,748억 원)은 교비회계 총액의 19.7%이고, 서울 16개 대규모 사립대학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9,497억 원)은 교비회계 총액의 12.5%임
 - 이에 비해, 연세대가 지원받은 국고보조금(687억 원)은 교비회계 총액의 6.9%이고, 고려대가 지원받은 국고보조금(511억 원)은 교비회계 총액의 7.2%로, 타 대학들에 비하여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
 - 이는 국고보조금의 상당액이 국가장학금이므로 연세대와 고려대의 국가장학금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임
-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연세대·고려대와 비교하면
 -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 16개 대규모 사립대학들이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합계(2조 5,709억 원)는 서울 전체 사립대학 합계(2조 9,374억 원)의 87.2%를 차지하고, 전국 156개 사립대학의 지원금 합계(7조 5,565억 원)의 34%를 차지함
 - 그중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연세대 지원금(4,042억 원)은 서울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지원금 합계의 15.7%를 차지하고, 전국 2위를 차지하는 고려대 지원금 합계(3,629억 원)는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의 14.1%를 차지함
 - 이러한 연·고대의 지원금(7,671억 원)은 서울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지원금 합계의 29.8%를 차지하지만, 서울대 지원금(1조 3,212억 원)의 58.1%(연세대 30.6%, 고려대 27.5%)에 각각 그침

< 표9 > 2024년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단위: 억 원)

학교명	중앙정부 지원액	지자체 지원액	합계
건국대	1,034	31	1,064
경희대	1,674	43	1,717
고려대	3,491	138	3,629
국민대	1,003	32	1,035

학교명	중앙정부 지원액	지자체 지원액	합계
동국대	934	40	974
상명대	448	65	513
성균관대	3,565	38	3,603
세종대	945	4	948
숙명여대	591	44	635
송실대	761	23	784
연세대	4,010	32	4,042
이화여대	1,284	41	1,324
중앙대	1,813	25	1,838
한국외대	510	15	525
한양대	2,327	59	2,386
홍익대	677	13	690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합계	25,068	642	25,709
서울 34개 사립대학 합계	28,581	793	29,374
전국 156개 사립대학 합계	72,275	3,290	75,565

출처: 대학재정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고등교육 재정지원. (학교명 가나다 순)

-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세대·고려대와 비교하면
 -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 16개 대규모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2,207만 원이고, 서울 전체 사립대학은 평균 2,051만 원이며, 전국 156개 사립대학은 평균 1,776만 원임
 - 서울 1위인 연세대 학생 1인당 교육비(4,084만 원)는 서울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평균(2,207만 원)의 1.85배이고 전국 사립대학 평균(1,776만 원)의 약 2.3배
 - 서울 2위인 고려대 학생 1인당 교육비(3,230만 원)는 서울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평균의 1.46배이고 전국 사립대학 평균의 약 1.82배임
 - 하지만 연·고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6,059만 원)에 비해 각각 67.4%와 53.3%에 그침

< 표10 > 2024년 서울 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학교명	총 교육비(A) (단위: 억 원)	재학생수(B) (단위: 명)	학생 1인당 교육비(A/B) (단위: 만 원)
연세대	13,236	32,413	4,084
고려대	9,896	30,637	3,230
성균관대	8,814	27,941	3,155
한양대	6,466	24,707	2,617
경희대	6,267	34,535	1,815
중앙대	5,417	29,912	1,811
이화여대	4,825	21,848	2,208
건국대	3,489	19,996	1,745
동국대	3,164	17,607	1,797
국민대	3,136	18,320	1,712
홍익대	2,800	21,967	1,275
세종대	2,659	15,495	1,716
송실대	2,442	17,277	1,413
한국외대	2,431	19,228	1,264
숙명여대	2,027	12,710	1,595
상명대	1,873	13,117	1,428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합계(평균)	78,942	357,710	2,207
서울 34개 사립대학 합계(평균)	91,349	445,403	2,051
전국 156개 사립대학 합계(평균)	224,837	1,266,124	1,776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사립대)

-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의 재학생과 전임교원 현황을 연세대·고려대와 비교하면
 - 이상과 같은 격차는 학생 및 교원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외부 연구비 수주는 대학원생 및 교원의 규모와 연관성이 높음
 - 서울 16개 대규모 사립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비율은 평균 68대 32인데 비해, 연세대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비율은 54대 46으로 재학생 규모가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 1위이고 고려대의 비율은 60대 40으로 재학생 규모가 서울 대규모 사립대학 3위임

- 서울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가운데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규모 차이가 큰 곳은 상명대(88 대 12)와 한국외대(82대 18)임
- 서울 16개 대규모 사립대학의 평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6.40명이고 전임교원 확보율은 평균 81.68%인데 비해, 연세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55명이고 전임교원 확보율은 법정기준을 초과한 100.68이며, 고려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2.25명이고 전임교원 확보율은 96.71%로 법정기준에 육박함

< 표11 > 서울 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재학생 및 전임교원 현황 (단위: 명, %)

학교명	재학생			전임교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A/B)	전임교원 확보율 (B/C)
	학부	대학원	합계(A)	전임교원 현 황(B)	교원 법정정 원(C)		
경희대	25,048	11,669	36,717	1,378	1,761	26.65	78.25
중앙대	23,409	8,227	31,636	1,164	1,450	27.18	80.28
고려대	20,680	13,934	34,614	1,556	1,609	22.25	96.71
연세대	19,963	16,738	36,701	1,786	1,774	20.55	100.68
성균관대	18,757	12,458	31,215	1,529	1,434	20.42	106.62
홍익대	17,673	5,681	23,354	693	1,113	33.70	62.26
한국외대	16,805	3,652	20,457	620	847	33.00	73.20
이화여대	15,932	8,724	24,656	969	1,138	25.44	85.15
한양대	15,808	11,438	27,246	1,142	1,264	23.86	90.35
건국대	15,491	5,876	21,367	645	1,040	33.13	62.02
국민대	14,478	5,003	19,481	639	889	30.49	71.88
송실대	14,209	4,161	18,370	492	822	37.34	59.85
동국대	13,559	6,468	20,027	684	904	29.28	75.66
세종대	12,365	4,826	17,191	575	805	29.90	71.43
상명대	11,607	1,530	13,137	458	614	28.68	74.59
숙명여대	10,219	2,897	13,116	414	588	31.68	70.41
서울 16개 사립 대학 평균	16,625	7,705	24,330	922	1,128	26.40	81.68

출처 :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사립대)
(학부 재학생 규모 순)

2 서울·수도권 vs. 지역

❖ 대학 개체수와 분포 비교

- 대학 개체수 비교
 -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총 330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는 총 115개 대학(34.8%)이 있고 비수도권에는 총 215개 대학(65.2%)이 있음
 - 수도권 총 115개 대학 중 일반대학(교대와 산업대 포함)은 73교(63.5%), 전문대학은 42교(36.5%)가 있고, 비수도권 총 215개 대학 중 일반대학은 122교(56.8%), 전문대학은 88교(40.9%), 특별법법인대가 5교(2.3%) 있음

< 표12 > 2024년 권역별 대학 분포 현황 (단위: 교)

권역		지역	대학 수 (합계)	국공립대학		특별법 법인대	사립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수도권	서울	서울	48	5	-	-	34	9
	경인권	경기	60	1	-	-	29	30
		인천	7	2	-	-	2	3
	소계		115	8	0	0	65	42
비수도권	강원	강원	16	3	1	-	6	6
	충청권	대전	15	2	-	1	8	4
		세종	3	0	-	-	2	1
		충남	20	2	1	-	12	5
		충북	17	4	1	-	8	4
	대경권	대구	11	2	-	1	1	7
		경북	32	2	1	-	16	13
	호남권	광주	17	2	-	1	8	6
		전남	19	3	1	1	6	8
		전북	17	3	-	-	7	7
	부울경	부산	22	4	-	-	10	8
		경남	18	3	2	-	5	8
		울산	4	0	-	1	1	2
	제주	제주	4	1	-	-	1	2
	소계		215	31	7	5	91	81
전국 합계			330	39	7	5	156	123

* 방송대 및 사이버(전문)대학, 대학원대학, 평생교육법 관련 대학 등은 제외함

- 대학 분포 비교
 - 국공립(전문)대학(특별법법인대 포함) 분포 비교
 - 국공립대학 39교와 특별법법인대 5교 및 공립전문대학 7교 등 총 51교 중에서 수도권에는 8교(15.7%), 비수도권에는 43교(84.3%)가 있음
- ※ 국공립대학 39교에는 국가거점국립대학 9교, 국가중심국립대학 17교, 교육대학 10교, 국립대법인 2교(서울대, 인천대), 공립대학 1교(서울시립대) 등이 포함됨

< 표13 > 2024년 권역별 국공립(전문)대학 분포 현황 (단위: 교)

권역		지역	대학 수 (합계)	일반대학					특별법 법인대	전문 대학
				국가 거점	국가 중심	교육 대학	국립대 법인	공립 대학		공립 대학
수도권	서울	서울	5	-	2	1	1	1	-	-
	경인권	경기	1	-	1	-	-	-	-	-
		인천	2	-	-	1	1	-	-	-
	소계		8	0	3	2	2	1	0	0
비수도권	강원	강원	4	1	1	1	-	-	-	1
	충청권	대전	3	1	1	-	-	-	1	-
		세종	0	-	-	-	-	-	-	-
		충남	3	-	1	1	-	-	-	1
		충북	5	1	3	-	-	-	-	1
	대경권	대구	3	1	-	1	-	-	1	-
		경북	3	-	2	-	-	-	-	1
	호남권	광주	3	1	-	1	-	-	1	-
		전남	5	-	2	1	-	-	1	1
		전북	3	1	1	1	-	-	-	-
	부울경	부산	4	1	2	1	-	-	-	-
		경남	5	1	1	1	-	-	-	2
		울산	1	-	-	-	-	-	1	-
	제주	제주	1	1	-	-	-	-	-	-
	소계		43	9	14	8	0	0	5	7
전국 합계			51	9	17	10	2	1	5	7

* 방송대 및 사이버(전문)대학, 대학원대학, 평생교육법 관련 대학 등은 제외함

- 사립대학 분포 비교

- 사립대학은 수도권에 65교(41.7%), 비수도권에 91교(58.3%)가 있으며 이를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대규모 38교 중 수도권에 22교(57.9%), 비수도권에는 16교(42.1%)가 있고
 - 중규모 53교 중 수도권에 19교(35.8%), 비수도권에는 34교(64.2%)가 있고
 - 소규모 35교 중 수도권에 12교(34.3%), 비수도권에는 23교(65.7%)가 있고
 - 극소형 30교 중 수도권에 12교(40%), 비수도권에는 18교(60%)가 있음
- ※ 2024년 기준, 학부 재학생 1만 명 이상을 대규모 사립대학,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을 중규모 사립대학, 1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을 소규모 사립대학, 1천 명 미만을 극소형 사립대학으로 분류함

- 사립전문대학 분포 비교

- 사립전문대학은 수도권에 42교(34.1%), 비수도권에 81교(65.9%)가 있으며 이를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대규모 31교 중 수도권에 19교(61.3%), 비수도권에는 12교(38.7%)가 있음
 - 중규모 47교 중 수도권에 16교(34%), 비수도권에는 31교(66%)가 있음
 - 소규모 26교 중 수도권에 4교(15.4%), 비수도권에는 22교(84.6%)가 있음
 - 극소형 19교 중 수도권에 3교(15.8%), 비수도권 16교(84.2%)가 있음
 - 대규모가 수도권에 많이 있고 개체수로는 경기(30교)와 경북(13교)에 특별히 많이 있음
- ※ 2024년 기준, 학부 재학생 4천 명 이상을 대규모 사립전문대학, 2천 명 이상 4천 명 미만을 중규모 사립전문대학,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을 소규모 사립전문대학, 1천 명 미만을 극소형 사립전문대학으로 분류함

권역		지역	사립대학					사립전문대학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극소형	합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극소형	합계
비수도권	대경권	대구	1	-	-	-	1	5	1	1	-	7
		경북	3	3	6	4	16	1	4	6	2	13
	호남권	광주	1	2	3	2	8	1	3	-	2	6
		전남	-	1	2	3	6	-	4	2	2	8
		전북	2	2	1	2	7	-	2	3	2	7
	부울경	부산	3	5	2	-	10	1	3	3	1	8
		경남	-	2	2	1	5	1	2	3	2	8
		울산	1	-	-	-	1	1	1	-	-	2
	제주	제주	-	-	-	1	1	1	-	1	-	2
	소계		16	34	23	18	91	12	31	22	16	81
전국 합계		38	53	35	30	156	31	47	26	19	123	

* 방송대 및 사이버(전문)대학, 대학원대학, 평생교육법 관련 대학 등은 제외함

❖ 사립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비교

- 수도권/비수도권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 규모 비교
 - 수도권 사립대학 65교의 국고보조금은 1조 5,514억 원(40%)이고 자금수입 합계의 14.2%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91교의 국고보조금은 2조 3,233억 원(60%)으로 자금수입 합계의 26.5%를 차지해 수도권보다 비중이 1.9배 높음
 - 규모별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22교)의 국고보조금은 1조 10억 원으로 자금수입 합계의 12.7%를 차지하는 데 비하여, 비수도권(19교)의 국고보조금은 9,132억 원으로 자금수입 합계의 26.4%를 차지하여 수도권보다 비중이 2배 정도 높음
 - 수도권 중규모 사립대학(19교)의 국고보조금은 4,324억 원으로 자금수입 합계의 18.4%를 차지하는 데 비하여, 비수도권 중규모 사립대학(34교)의 국고보조금은 1조 307억 원으로 자금수입 합계의 27.9%를 차지하여 수도권보다 비중이 1.5배 정도 높음
 - 수도권 소규모 및 극소형 사립대학(24교)의 국고보조금은 1,180억 원으로 자금수입 합계의 16.2%를 차지하는 데 비하여, 비수도권(41교)의 국고보조금은 3,795억 원으로 자금수입 합계의 23.5%를 차지하여 1.5배 정도 비중이 높음
 -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국고보조금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장학금이 비수도권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 표14 > 2024년 권역별 사립(전문)대학 분포 현황 (단위: 교)

권역	지역	사립대학						사립전문대학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극소형	합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극소형	합계
수도권	서울	서울	16	9	4	5	34	5	2	1	1	9
	경인권	경기	5	10	8	6	29	13	12	3	2	30
		인천	1	-	-	1	2	1	2	-	-	3
	소계		22	19	12	12	65	19	16	4	3	42
비수도권	강원	강원	-	5	1	-	6	-	2	-	4	6
	충청권	대전	1	4	1	2	8	1	2	1	-	4
		세종	-	1	-	1	2	-	1	-	-	1
		충남	3	6	2	1	12	-	3	1	1	5
		충북	1	3	3	1	8	-	3	1	-	4

< 표15 > 2024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현황 (단위: 교, 억 원, %)

권역	구분	학교수	등록금 수입	비율	국고 보조금	비율	기타	비율	자금수입 합계	비율
수도권	대규모	22	42,330	53.8	10,010	12.7	26,335	33.5	78,675	100
	중규모	19	12,033	51.2	4,324	18.4	7,158	30.4	23,515	100
	소규모	12	2,749	48.3	964	16.9	1,975	34.7	5,688	100
	극소형	12	625	39.1	216	13.6	755	47.3	1,597	100
	소계	65	57,738	52.7	15,514	14.2	36,223	33.1	109,475	100
비수도권	대규모	16	17,306	50.1	9,132	26.4	8,089	23.4	34,526	100
	중규모	34	18,008	48.7	10,307	27.9	8,632	23.4	36,946	100
	소규모	23	5,211	35.4	3,485	23.7	6,013	40.9	14,710	100
	극소형	18	575	40.9	310	22.0	521	37.0	1,406	100
	소계	91	41,100	46.9	23,233	26.5	23,255	26.6	87,588	100
전국 합계		156	98,838	50.2	38,748	19.7	59,478	30.2	197,063	100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자금계산서)

● 수도권/비수도권 사립대학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비교

- 수도권 사립대학 65교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3조 9,887억 원으로 학교당 634억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 사립대학 91교의 지원금은 3조 2,389억 원으로 학교당 377억 원임
- 규모별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22교)이 지원받은 금액은 3조 1,847억 원으로 학교당 1,448억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16교)이 지원받은 금액은 1조 3,153억 원으로 학교당 822억 원임
- 수도권 중규모 사립대학(19교)이 지원받은 금액은 7,684억 원으로 학교당 404억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34교)이 지원받은 금액은 1조 3,153억 원으로 학교당 408억 원임
- 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12교)의 지원금은 1,460억 원으로 학교당 122억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23교)의 지원금은 6,996억 원으로 학교당 304억 원임
- 수도권 극소형 사립대학(12교)의 지원금은 231억 원으로 학교당 19억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18교)의 지원금은 329억 원으로 학교당 18억 원임
- 비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이 수도권보다 학교당 지원이 2.5배 정도 많은 것은 을지대(대전)와 고신대(부산) 등 부속병원을 보유한 대학들과 한국기술교육대(충남), 포항공대(경북) 등의 비중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임

< 표16 > 2024년 사립대학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단위: 교, 억 원)

권역	구분	학교수 (A)	중앙정부 지원액	지자체 지원액	합계 (B)	학교당 (B/A)
수도권	대규모	22	30,984	863	31,847	1,448
	중규모	19	7,360	324	7,684	404
	소규모	12	1,319	140	1,460	122
	극소형	12	224	7	231	19
	소계	65	39,887	1,334	41,221	634
	비수도권	91	32,389	1,955	34,344	377
합계		156	72,275	3,290	75,565	484

출처 : 대학재정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고등교육 재정지원

❖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인적 현황 비교

- 수도권/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 수도권 사립대학 65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937만 원이고, 비수도권 91교의 그것은 1,593만 원으로 수도권보다 344만 원 적음
 - 규모별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68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1,535만 원으로 수도권보다 533만 원 적음
 - 수도권 중규모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51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1,502만 원으로 수도권보다 149만 원 적음
 - 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91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2,098만 원으로 수도권보다 507만 원 많음
 - 수도권 극소형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60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1,376만 원으로 수도권보다 16만 원 많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대규모와 소규모 사립대학에서 벌어지는데 특히 소규모 사립대학의 경우 한국기술교육대(충남)와 포항공대(경북) 등의 비중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임

< 표17 > 2024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권역	구분	학교수 (A)	총 교육비(A) (단위: 억 원)	재학생수(B) (단위: 명)	학생 1인당 교육비(A/B) (단위: 만 원)
수도권	대규모	22	97,881	473311	2,068
	중규모	19	25,292	153186	1,651
	소규모	12	5,914	37177	1,591
	극소형	12	1,256	9240	1,360
	소계	65	130,343	672,914	1,937
비수도권	대규모	16	37,571	244787	1,535
	중규모	34	38,943	259303	1,502
	소규모	23	16,676	79484	2,098
	극소형	18	1,308	9501	1,376
	소계	91	94,498	593075	1,593
전국 합계		156	224,841	1,265,989	1,776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사립대)

● 수도권/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재학생과 전임교원 현황 비교

- 수도권/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재학생 현황을 비교하면

- 2023년도 기준으로 수도권 사립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비율은 74대 26이고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그것은 86대 14임
- 이를 규모별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비율은 71대 29이고 비수도권은 85대 15이며, 수도권 중규모 사립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비율은 82대 18이고 비수도권은 88대 12임
- 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비율은 74대 26이고 비수도권은 85대 15이며, 수도권 극소형 사립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비율은 49대 51이고 비수도권은 59대 41임
- 극소형 사립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비율은 수도권에서 역전되어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비율 간격이 좁혀져 있음

< 표 18 > 2023년 사립대학 재학생 및 전임교원 현황

(단위: 명, %)

권역	구분	재학생			전임교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A/B)	전임교원 확보율 (B/C)
		학부	대학원	합계(A)	전임교원 현황(B)	교원 법정정 원(C)		
수도권	대규모	339,853	136,277	476,130	17,663	22,148	27.0	79.7
	중규모	132,368	28,711	161,079	6,270	7,466	25.7	84.0
	소규모	29,834	10,307	40,141	1,671	1,845	24.0	90.6
	극소형	5,529	5,631	11,160	395	477	28.3	82.8
	소계	507,584	180,926	688,510	25,999	31,936	26.5	81.4
비수도권	대규모	244,998	43,892	288,890	11,411	13,714	25.3	83.2
	중규모	232,687	30,123	262,810	10,305	12,456	25.5	82.7
	소규모	70,193	11,911	82,104	3,335	3,913	24.6	85.2
	극소형	6,265	4,293	10,558	492	468	21.5	105.1
	소계	554,143	90,219	644,362	25,543	30,551	25.2	83.6
전국 합계		1,061,727	271,145	1,332,872	51,542	62,487	25.9	82.5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사립대)

- 수도권/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현황을 비교하면

- 2023년도 기준으로 수도권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6.6명이고 비수도권은 25.2명이며, 수도권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81.4%이고 비수도권은 83.6%인데, 이는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재학생 부족이 반영된 결과임
- 규모별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7명이고 비수도권은 25.3명이며,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79.7%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83.2%임
- 수도권 중규모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5.7명이고 비수도권은 25.5명이며, 수도권 중규모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84%이고 비해 비수도권은 82.7%임
- 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4명이고 비수도권은 24.6명이며, 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90.6%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85.2%임
- 수도권 극소형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8.3명이고 비수도권은 21.5명이며, 수도권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82.8%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105.1%임
- 이상에서 보듯, 대규모와 극소형 사립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고, 중규모와 소규모 사립대학은 비수도권이 높음

3 국공립 vs 사립

❖ 대학 개체수와 규모 비교

● 대학 개체수 비교

- 특별법법인대와 공립대학을 국공립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2024년 기준으로 전국 330교 가운데 수도권에는 국공립이 8교, 사립이 107교로 총 115교(34.8%)가 있고, 비수도권에는 국공립이 43교, 사립이 172교로 총 215교(65.2%)가 있음
- 대학 개체수 기준으로 국립과 사립의 비율이 15대 85인데, 수도권의 사립 비율은 93%이고 비수도권의 사립 비율은 80%로 수도권에 국공립이 부족함

< 표19 > 2024년 국·사립 현황 (단위: 교, %)

권역	대학수	국공립				사립			사립 비율
	합계	일반 대학	전문 대학	특별법 법인대	소계	일반 대학	전문 대학	소계	
수도권	115	8	0	0	8	65	42	107	93.0
비수도권	215	31	7	5	43	91	81	172	80.0
전국 합계	330	39	7	5	51	156	123	279	84.5

* 방송대 및 사이버(전문)대학, 대학원대학, 평생교육법 관련 대학 등은 제외함

- 학교 종류별 국·사립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대학 200교 중에서 수도권에는 73교(36.5%)가 있고 비수도권에는 127교(63.5%)가 있으며, 사립 비율이 78%인데, 수도권은 사립 비율이 89%이고, 비수도권은 71.7%임
- 전국의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에는 42교(32.3%)가 있고 비수도권에는 88교(67.7%)가 있으며, 사립 비율은 94.6%인데, 수도권에는 공립전문대가 전무하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 흡수되고 있음

< 표20 > 2024년 학교 종류별 국·사립 현황 (단위: 교, %)

권역	대학수	일반대학				사립 비율	전문대학			사립 비율
	합계	국공립	특별법 법인대	사립	소계		공립	전문 대학	소계	
수도권	115	8	0	65	73	89.0	0	42	42	100.0
비수도권	215	31	5	91	127	71.7	7	81	88	92.0
전국 합계	330	39	5	156	200	78.0	7	123	130	94.6

* 방송대 및 사이버(전문)대학, 대학원대학, 평생교육법 관련 대학 등은 제외함

● 대학 규모 비교

- 2024년 학부 재학생 기준으로, 전국의 재학생 1,761,969명 가운데 국공립의 재학생 수는 334,445명(19%)이고 사립의 재학생 수는 1,427,524명(81%)임
- 국공립의 재학생 충원율은 108.2%이고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97.9%인데, 사립의 재학생 충원율은 108.8%로 국공립과 비슷하고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90.9%로 국공립보다 7%p 낮음

< 표21 > 2024년 국·사립 재학생 현황 (단위: 교, 명, %)

구분		학교 수	학생정원 (A)	학생 모집 정지 인원(B)	재학생			재학생 충원율 {C/(A-B)} X100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D/(A-B)} X100
					계(C)	정원내(D)	정원외		
국공립	국공립대	39	295,769	93	320,998	290,264	30,734	108.6	98.2
	특별법법인대	5	7,440	0	7,836	6,990	846	105.3	94.0
	공립전문대	7	6,104	18	5,611	5,312	299	92.2	87.3
	소계	51	309,313	111	334,445	302,566	31,879	108.2	97.9
사립	사립대	156	969,085	464	1,068,503	909,105	159,398	110.3	93.9
	사립전문대	123	344,292	632	359,021	283,545	75,476	104.5	82.5
	소계	279	1,313,377	1,096	1,427,524	1,192,650	234,874	108.8	90.9
전국 합계		330	1,622,690	1,207	1,761,969	1,495,216	266,753	108.7	92.2

출처: 대학알리미 2024년 재학생 충원율(대학), 대학알리미 2024년 재학생 충원율(전문대학)

❖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비교

● 국고보조금 규모 비교

- 국공립의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이전수입’은 총 4조 5,496억 원(47.3%)이고 사립의 국고보조금은 5조 609억 원(52.7%)으로 국·사립 국고보조금 총액은 9조 6,105억 원이며 세입합계(자금수입 합계)의 29.1%를 차지함
- 국공립의 국고보조금(4조 5,496억 원)이 세입 합계(8조 9,654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7%인데 비해, 사립의 국고보조금(5조 609억 원)은 자금수입 합계의 21.1%를 차지함
- 국공립의 등록금수입은 1조 5,615억 원으로 세입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4%인데 비해, 사립의 등록금수입은 12조 386억 원으로 자금수입 합계의 50.1%를 차지함

< 표22 > 2024년 국·사립 재정 수입 현황 (단위: 교, 억 원, %)

구분		학교 수	등록금 수입(A)	비율	이전수입 (국고 보조금)(B)	비율	기타(C)	비율	세입합계 (자금수입 합계)(A+B+C)	비율
국공립	국공립대	37	12,929	17.6	36,688	49.8	24,014	32.6	73,631	100.0
	국립대법인	2	2,557	17.8	7,816	54.4	4,005	27.9	14,378	100.0
	공립전문대	7	129	7.8	992	60.3	524	31.9	1,645	100.0
	소계	46	15,615	17.4	45,496	50.7	28,543	31.8	89,654	100.0
사립	사립대	156	98,838	50.2	38,748	19.7	59,478	30.2	197,063	100.0
	사립전문대	124	21,548	49.9	11,861	27.5	9,783	22.6	43,192	100.0
	소계	280	120,386	50.1	50,609	21.1	69,261	28.8	240,255	100.0
합계		326	136,001	41.2	96,105	29.1	97,804	29.6	329,909	100.0

*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결산(자금계산서)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사립전문대학 교비회계 결산(자금계산서)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공립전문대학 대학회계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국립대법인(서울대, 인천대)
** 2023년도 사립전문대학 124교. 본 통계에서는 특별법법인대 5교를 제외함

-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비교
 - 특별법법인대 5교를 제외한 국공립 46교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중앙정부 7조 9,852억 원, 지자체 4,531억 원으로 총 8조 4,382억 원(46.7%)이고, 사립 281교의 고등교육 재정지원금은 중앙정부 9조 1,991억 원, 지자체 4,290억 원으로 9조 총 6.281억 원(53.3%)임

< 표23 > 2024년 국·사립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단위: 교, 억 원, %)

구분		학교수	중앙정부 지원액	비율	지자체 지원액	비율	합계	비율
국공립	국공립대	39	79,327	46.2	3,677	41.7	83,004	45.9
	공립전문대	7	525	0.3	854	9.7	1,379	0.8
	소계	46	79,852	46.5	4,531	51.4	84,382	46.7
사립	사립대	156	72,275	42.1	3,290	37.3	75,565	41.8
	사립전문대	125	19,716	11.5	1,000	11.3	20,716	11.5
	소계	281	91,991	53.5	4,290	48.6	96,281	53.3
합계		327	171,843	100.0	8,820	100.0	180,663	100.0

* 출처: 대학재정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고등교육 재정지원
** 본 통계에서는 특별법법인대 5교를 제외함, 2023년도 결산 당시 사립전문대 125교

- 대학 개체수 차이에 비하여 국공립의 지원액이 사립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은 ‘국립대 정상운영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사립의 경우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의 개체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나 지원액 차이가 큰 것은 개별 대학의 규모 차이도 있지만 경쟁적인 사업 위주의 ‘연구개발’이 포함된 ‘일반 지원사업’ 지원금이 전문대학보다 일반대학에 쏠린 결과이기도 함

❖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인적 현황 비교

-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국공립 51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831만 원이고 사립 280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54만 원으로 국공립이 사립보다 1,177만 원 많음
 - 국공립대학 39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493만 원이고 사립대학 156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776만 원으로 국공립대학이 717만 원 많음
 - 공립전문대 7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529만 원이고 사립전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31만 원으로 공립전문대가 사립보다 1,298만 원 많음
 - 대학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총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국공립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사립보다 크게 많은 이유는 특별법법인대의 영향도 있지만 사립전문대학의 교육비가 현저히 낮은 탓이기도 함
 - 특별법법인대 5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9,833억 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학교 규모에 비해 총교육비 규모가 크고 재학생 수는 작은 결과임

< 표24 > 2024년 국·사립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권역		학교 수 (단위: 교)	총 교육비(A) (단위: 억 원)	재학생수(B) (단위: 명)	학생 1인당 교육비(A/B) (단위: 만 원)
국공립	국공립대	39	99,958	401,019	2,493
	특별법법인대	5	19,306	19,635	9,833
	공립전문대	7	1,473	5,825	2,529
	소계	51	120,737	426,479	2,831
사립	사립대	156	224,841	1,265,989	1,776
	사립전문대	124	44,707	363,200	1,231
	소계	280	269,547	1,629,189	1,654
합계		331	390,285	2,055,668	1,899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국공립대, 특별법법인대, 전문대)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사립대학)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사립전문대학). 2023년도 사립전문대 124교

● 재학생과 전임교원 현황 비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수는 국공립이 461,066명(21.5%)이고 사립은 1,687,319명(78.5%)으로 총 2,148,385명이며, 전임교원 수는 국공립이 20,228명(24.6%)이고 사립이 62,051명(75.4%)으로 총 82,279명임
- 국공립대학 39교의 재학생 수는 428,685명(24.3%)이고 사립대학 156교의 재학생 수는 1,332,872명(75.7%)이며, 전임교원 수는 국공립대학이 18,634명(26.6%)이고 사립대학이 51,542명(73.4%)임
- 국공립대학 39교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3명이고 사립대학 156교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5.9명이며, 전임교원 확보율은 국공립대학이 88.2%이고 사립대학이 82.5%임
- 사립대학 156교(1,332,872명)와 사립전문대학 124교(354,447명)의 재학생 수는 80대 20의 비율이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사립대학이 25.9명이고 사립전문대학이 33.7명이며 전임교원 확보율은 사립대학이 82.5%이고 사립전문대학이 61.4%임

< 표25 > 2023년 국·사립 재학생 및 전임교원 현황 (단위: 교, 명, %)

구분		학교 수	재학생			전임교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A/B)	전임교원 확보율 (B/C)
			학부	대학원	합계(A)	전임교원 현황(B)	교원법정 정원(C)		
국공립	국공립대	39	318,801	109,884	428,685	18,634	21,116	23.0	88.2
	특별법법인대	5	7,610	19,160	26,770	1,397	1,326	19.2	105.4
	공립전문대	7	5,611	0	5,611	197	279	28.5	70.6
	소계	51	332,022	129,044	461,066	20,228	22,721	22.8	89.0
사립	사립대	156	1,061,727	271,145	1,332,872	51,542	62,487	25.9	82.5
	사립전문대	124	354,447	0	354,447	10,509	17,125	33.7	61.4
	소계	280	1,416,174	271,145	1,687,319	62,051	79,612	27.2	77.9
합계		331	1,748,196	400,189	2,148,385	82,279	102,333	26.1	80.4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대학)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전문대학)

4 일반대 vs. 전문대

❖ 대학 개체수와 규모 비교

● 대학 개체수 비교

- 특별법법인대 5교를 일반대학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2024년 기준으로 일반대학은 200교(60.6%)이고 전문대학은 130교(39.4%)임
- 일반대학(200교) 내에서 사립(156교)은 78%를 차지하는 데 비해, 전문대학(130교) 내에서 사립(123교)은 94.6%를 차지함

< 표26 > 2024년 일반대와 전문대 현황 (단위: 교, 명, %)

구분		학교 수	학생 정원(A)	학생 모집 정지 인원(B)	재학생			재학생 충원율 {C/(A-B)} X100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D/(A-B)} X100
					계(C)	정원내 (D)	정원외		
일반대	국공립대	39	295,769	93	320,998	290,264	30,734	108.6	98.2
	특별법법인대	5	7,440	0	7,836	6,990	846	105.3	94.0
	사립대	156	969,085	464	1,068,503	909,105	159,398	110.3	93.9
	소계	200	1,272,294	557	1,397,337	1,206,359	190,978	109.9	94.9
전문대	공립전문대	7	6,104	18	5,611	5,312	299	92.2	87.3
	사립전문대	123	344,292	632	359,021	283,545	75,476	104.5	82.5
	소계	130	350,396	650	364,632	288,857	75,775	104.3	82.6
전국 합계		330	1,622,690	1,207	1,761,969	1,495,216	266,753	108.7	92.2

* 방송대 및 사이버(전문)대학, 대학원대학, 평생교육법 관련 대학 등은 제외함
* 출처: 대학알리미 2024년 재학생 충원율(대학), 대학알리미 2024년 재학생 충원율(전문대학)

● 대학 규모 비교

- 2024년 기준으로 일반대학(200교)의 재학생 수는 1,397,337명(79.3%)이고 전문대학(130교)의 재학생 수는 364,632명(20.7%)임
- 일반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109.9%이고 전문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104.3%이며,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일반대학이 94.9%인데 비해 전문대학은 82.6%임

❖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비교

- 국고보조금 규모 비교
 - 일반대학의 국고보조금(이전수입)은 총 8조 3,252억 원(86.6%)이고 전문대학의 국고보조금(이전수입)은 총 1조 2,853억 원(13.4%)으로, 87대 13의 비율임
 - 일반대학의 국고보조금(이전수입, 8조 3,252억 원)이 자금수입 합계(세입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2%이고, 전문대학의 국고보조금(이전수입, 1조 2,853억 원)이 자금수입 합계(세입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7%임
 - 국공립의 국고보조금이 세입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사립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일반대학(29.2%)과 전문대학(28.7%)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모두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 표 27 > 2024년 일반대와 전문대의 재정 수입 현황 (단위: 교, 억 원, %)

구분		학교수	등록금 수입(A)	비율	이전수입 (국고 보조금)(B)	비율	기타	비율	세입합계 (자금수입 합계)(A+B+C)	비율
일반대	국공립대	37	12,929	17.6	36,688	49.8	24,014	32.6	73,631	100.0
	국립대법인	2	2,557	17.8	7,816	54.4	4,005	27.9	14,378	100.0
	사립대	156	98,838	50.2	38,748	19.7	59,478	30.2	197,063	100.0
	소계	195	114,324	40.1	83,252	29.2	87,497	30.7	285,072	100.0
전문대	공립전문대	7	129	7.8	992	60.3	524	31.9	1,645	100.0
	사립전문대	124	21,548	49.9	11,861	27.5	9,783	22.6	43,192	100.0
	소계	131	21,677	48.3	12,853	28.7	10,307	23.0	44,837	100.0
합계		326	136,001	41.2	96,105	29.1	97,804	29.6	329,909	100.0

*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결산(자금계산서)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사립전문대학 교비회계 결산(자금계산서)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공립전문대학 대학회계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국립대법인(서울대, 인천대)
** 2023년도 사립전문대학 124교. 본 통계에서는 특별법법인대 5교를 제외함

-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비교
 - 특별법법인대 5교를 제외한 일반대학 195교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15조 8,569억 원(중앙정부 15조 1,602억 원, 지자체 6,966억 원)으로 전체(18조 663억 원)의 87.8%를 차지함
 - 전문대학 132교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2조 2,095억 원(중앙정부 2조 241억 원, 지자체 1,854억 원)으로 전체(18조 663억 원)의 12.2%를 차지함
 - 일반대학 중에서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개체수가 20%에 지나지 않으나 고등교육 재정지원액이 사립대학보다 큰 이유는 국공립대학의 ‘국립대 정상운영비 지원’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임

< 표 28 > 2024년 일반대와 전문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단위: 교, 억 원, %)

구분		학교수	중앙정부 지원액	비율	지자체 지원액	비율	합계	비율
일반대	국공립대	39	79,327	46.2	3,677	41.7	83,004	45.9
	사립대	156	72,275	42.1	3,290	37.3	75,565	41.8
	소계	195	151,602	88.2	6,966	79.0	158,569	87.8
전문대	공립전문대	7	525	0.3	854	9.7	1,379	0.8
	사립전문대	125	19,716	11.5	1,000	11.3	20,716	11.5
	소계	132	20,241	11.8	1,854	21.0	22,095	12.2
합계		327	171,843	100.0	8,820	100.0	180,663	100.0

* 출처: 대학재정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고등교육 재정지원
** 본 통계에서는 특별법법인대 5교를 제외함, 2023년도 결산 당시 사립전문대 125교

❖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인적 현황 비교

-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 2023년 결산 기준으로 특별법법인대를 포함한 일반대학 200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40만 원이고 전문대학 131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51만 원으로 일반대학이 전문대학보다 789만 원 많음
 -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대학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총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전문대학의 교육비가 현저히 낮음

< 표29 > 2024년 일반대와 전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권역		학교 수 (단위: 교)	총 교육비(A) (단위: 억 원)	재학생수(B) (단위: 명)	학생 1인당 교육비(A/B) (단위: 만 원)
일반대	국공립대	39	99,958	401,019	2,493
	특별법법인대	5	19,306	19,635	9,833
	사립대	156	224,841	1,265,989	1,776
	소계	200	344,105	1,686,643	2,040
전문대	공립전문대	7	1,473	5,825	2,529
	사립전문대	124	44,707	363,200	1,231
	소계	131	46,180	369,025	1,251
합계		331	390,285	2,055,668	1,899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국공립대, 특별법법인, 전문대)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사립대학)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사립전문대학), 2023년도 사립전문대 124교

● 재학생과 전임교원 현황 비교

- 2023년도를 기준으로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수는 일반대학이 1,788,327명(83.2%)이고 전문대학이 360,058명(16.8%)으로 총 2,148,385명이며, 전임교원 수는 일반대학이 71,573명(87%)이고 전문대학이 10,706명(13%)으로 총 82,279명임
- 일반대학(200교)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5명이고 전문대학(131교)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3.6명이며, 전임교원 확보율은 일반대학이 84.3%이고 전문대학이 61.5%임
- 전임교원 수의 부족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상승을 초래함

< 표30 > 2023년 일반대와 전문대의 재학생 및 전임교원 현황 (단위: 교, 명, %)

구분		학교 수	재학생			전임교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A/B)	전임교원 확보율 (B/C)
			학부	대학원	합계(A)	전임교원 현황(B)	교원법정 정원(C)		
일반대	국공립대	39	318,801	109,884	428,685	18,634	21,116	23.0	88.2
	특별법법인대	5	7,610	19,160	26,770	1,397	1,326	19.2	105.4
	사립대	156	1,061,727	271,145	1,332,872	51,542	62,487	25.9	82.5
	소계	200	1,388,138	400,189	1,788,327	71,573	84,929	25.0	84.3
전문대	공립전문대	7	5,611	0	5,611	197	279	28.5	70.6
	사립전문대	124	354,447	0	354,447	10,509	17,125	33.7	61.4
	소계	131	360,058	0	360,058	10,706	17,404	33.6	61.5
합계		331	1,748,196	400,189	2,148,385	82,279	102,333	26.1	80.4

출처: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대학)
대학알리미 2023년도 결산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전문대학)

IV. 대학 서열화의 원인과 과정

1 학벌주의 **조윤희**

-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이자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성취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
- 이런 현실이 대학의 서열화 양산, 나아가 대학 간의 위계질서를 고착화하고 및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
- 대한민국 사회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됨
- 동시에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세대 간·계층 간 불평등 구조에 대한 불편함도 강하게 표출되며, 이런 모순된 태도가 ‘학벌주의’를 만들어내는 자양분을 제공
- 이러한 학벌주의는 대학서열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 한국 사회의 계층의식과 의사결정 방식, 심리적·문화적 뿌리를 가진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본 절에서는 대학서열화의 원인과 과정을 분석, 특히 학벌주의가 이를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이 된다는 점에 주목, 한국인의 계층의식의 이중성과 내면화, 체면 중시와 남을 의식하는 의사결정 방식이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논의하고자 함

❖ 학벌주의와 한국 사회의 심리적 구조

- 한국형 서열화의 뿌리인 학벌주의
 - 학벌주의의 구조적 작동
 - ① 학벌은 단순한 학교 명칭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신뢰도, 취업 가능성, 결혼 시장 가치 등 다양한 사회 자원에 영향을 미침
 - ② 채용 시 ‘학벌’이 여전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유는 사회 전체가 대학을 ‘계층 구별 도구’로 내면화했기 때문
 - ③ ‘출신대학을 이력서에 적지 말자’는 블라인드 테스트 운동이 있었으나, 실제 기업 실무에서는 여전히 학벌이 필터로 작용, 사회적 불평등은 재생산이 되고 있음
 - ④ 상위 서열 대학 졸업생들은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얻는 반면, 하위 서열 대학 졸업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
 - ⑤ 대학서열화는 학벌에 따른 계층화를 고착화하며,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 심화

- 부모 세대의 계층 보존 전략

- ①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됨
- ②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위 대학 진학이 곧 ‘생존 전략’임을 강하게 내면화시킴
- ③ 중상층 부모일수록 사교육 투자에 적극적, 이는 다시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켜줌
- ④ 부모 세대는 자녀의 대학 진학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자녀가 상위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좌절감과 수치심을 부모의 것으로 전이시킨 경향이 있음. 그로 인해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와 압박 부여

- 계층의식의 이중성

- ① 한편으로는 대학서열화에 비판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서열화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중성을 보임
- ② 학벌주의는 단순히 외부적 압력의 작용이 아닌, 개인 내부에서 내면화된 계층의식을 통해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
- ③ 이는 학벌에 따라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을 초래,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지속시킴
- ④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계층의식을 별다른 자각 없이 계층의식으로 내면화시켜줌

❖ 학벌주의를 뒷받침해 온 이중적 계층의식

- 상승 욕구와 서열 비판의 인지부조화

- 열망과 비판의 부조화

- ① ‘내 자식은 올라가야 한다’는 열망과 ‘사회 전체의 서열화는 문제다’라는 비판이 공존
- ② 일종의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현상.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개인은 그 구조 속에서 ‘상위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동시에 품음
- ③ 이러한 현상의 반영인 대학서열화는 단순히 제도적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심리적·문화적 요인들이 대학서열화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

-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개인의 계층적 지위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

- ⇒ 학벌은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성공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학벌주의와 계층의식은 사회학적 접근과 동시에 심리적·문화적 분석을 요구

● 체면의식과 타인 평가 중심의 의사결정

- 한국 사회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을 강하게 의식하는 문화(상대평가 문화)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대학 선택이나 직업 선택에서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됨
-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는 특히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대학서열화 문제를 심화시킴
- 학벌은 개인의 사회적 체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부모 세대의 경우 자녀의 학벌을 자신의 사회적 체면으로 동일시함.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갔다’는 발언은 단순히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을 넘어,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은 자녀의 학벌을 관리하려는 강한 동기가 되고 과감한 교육 투자로 이어짐
- 이처럼 한국인의 의사결정 방식은 개인적 선택보다 집단적 기대와 타인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는 사교육 투자와 대학 입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짐
- 따라서 주변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사교육 투자가 ‘필수’라는 압박감을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들은 자신의 성적이나 재능에 맞는 지방대학 진학보다 재수를 선택하는 비율을 높여놓은 주요인이 됨
- 이런 현상은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에서 한국이 ‘집단주의’ 및 ‘권력거리’가 높게 나타나, 서열 중심 문화에 취약하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박경환, 2001)
- ① 호프스테드는 문화를 ‘특정 환경하에서의 사람들의 집단적인 정신적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민상희, 2021)하면서, ‘문화는 개개인의 특징이 아니며 동일한 교육과 생활경험에 의해 조건화 된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 특성’으로 봄(Mooij, 2003)
- ② 호프스테드(Hofstede 1980, 1983)는 세계 여러 국가의 조직문화의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 71개국의 IBM 직원들의 가치관 조사를 실시, 국가별 조직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5가지 차원을 조사함
- ③ 권력거리(power distance),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남성적성향 대 여성적성향 (masculinity vs femininity),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를 제시함
- ④ 권위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용정도를 알아본 ‘권력거리(power distance)’는 권력이 약한 자가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을 예상 또는 수용하는 정도로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권력거리 순위와 지수는 가장 높은

국가로서 말레이시아(104)에 비해 한국은 60, 가장 지수가 낮은 국가로서 일본이 54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차재호, 나은영 역, 1996)

- ⑤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란 한 사회가 어떤 성향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것인데, 집단주의는 조직이나 집단 상황에서 충성에 대한 대가로 구성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차원으로 정의됨(서영택, 심성욱, 2017)
- ⑥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그들 집단의 조화나 합의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의사결정을 위한 사실적 정보에 의존하는 개인의 독창력과 업적이 강조되며, 집단주의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비언어적이고 모호한 표현적 특성을 지니는데 반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메시지의 명료성이 강조됨(김유경, 1999)
- ⑦ 호프스테드(Hofstede, 1998)에 의하면 일본의 개인지수는 46, 한국은 18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됨(차재호, 나은영 역, 1996)

❖ 대학 서열화를 지속시키는 심리적 매커니즘

- 계층 상승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입시와 사교육에 과잉 투자 초래
 - 타인의 평가를 중시하는 문화가 부른 학벌주의
 - ‘좋은 대학’ 중심의 줄 세우기로 나타나 온 것이 한국사회의 모습임
 - 이러한 사회구조를 끊임없이 비판하면서도 철저하게 개인의 욕망과는 분리시켜옴
- ‘서열은 문제지만 우리 애는 꼭 SKY로!’
 -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 ① 개인적 차원에서 대학서열화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학벌에 따른 자존감 문제를 야기함
 - ② 사회적 차원으로 볼 때,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며,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

❖ 결론, 대학격차 해소를 위한 조건

- 교육으로 인해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중임
 - ※ 실제로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강화되고 교육격차가 확대되면서 교육의 사다리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음
 - 낮은 사회 이동성은 형평성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런 부정적 인식에 일조하는 것이 지역 간 대학의 불균형일 것임

- 대학서열화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심리적·문화적 문제를 반영하는 복합적 현상이니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노력이 필요
 -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장
 - 대학 간 서열을 완화시키기위해서는 대학 간 차별을 줄이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권 대학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함
- 이를 위해 학벌 중심의 평가 기준을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함
 - 기업과 정부는 학벌보다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이므로 학벌주의와 계층의식을 극복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국민적 의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 이러한 과제의 해소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임

2 입시제도 하병수

❖ 한국의 입시제도 분석

- 한국의 입시 경쟁교육의 문제점
 -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
 - 치열한 경쟁과 입시노동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
 - 입시 위주 교육, 문제 풀이 중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의 왜곡, 직업·전공 불일치 등
 - 계층 간·지역 간 교육 불평등의 심화
- 한국의 대입제도의 특징
 - 대학 입시 경쟁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3가지 변수
 - ① (대학 서열 체제) 대학-지역-학과 서열 고착화, 세계 최고 수준
 - ② (학력과 학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자본(취업과 승진의 차별)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자본(사회적 평판, 인격의 판단 기준으로 작동)으로 기능
 - ③ (사회적 불평등과 임금 격차) 노동시장 양극화, 소득 불평등 수준 매우 높음
 - 폐쇄적 지대 추구형 시험 능력주의
 - ① (폐쇄적) 대학입시가 계층 이동의 핵심적 출구 역할, 계층 이동의 통로가 매우 좁음

- ② (지대 추구형(rent seeking)) 한 번의 시험을 통해 높은 학벌, 자격을 취득하면 능력과 무관하게 평생 자원 배분의 유리한 지위 차지함
- ③ (시험 능력주의) 압축근대화 과정에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 개발
여유 부족, 시험은 가장 쉽고, 간명, 저렴하게 사람을 분별하고 선발할 수 있는 수단
- 변별력과 형식적 공정성 중시

< 표31 > 한국 입시제도의 특징과 결과

내용	특징	결과
상대평가 중심의 고부담 시험	치열한 입시 경쟁	• 경쟁지상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 • 능력주의와 승자독식사회(소수의 반사회적 엘리트와 다수의 패배자) •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대물림 •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로 교육 주체의 고통(저출산 고령화 사회)
5지 선다형 중심	주입식-암기중심 반복적 문제풀이	• 사유 없는 지식의 암기 • 비판적·개념적 사유 능력의 부재 • 상상력과 창조성의 결여

3 대학재정 채희을

❖ 대학재정의 격차가 대학서열화 고착의 원인으로 작용

- 대학 재정 여건의 차이는 대학 서열화의 결과인 동시에 교육여건의 질적 차이를 불러일으키며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경상손익으로 파악한 대학의 재정여건을 보면 수도권대학이 지방대학보다, 대규모 대학이 소규모대학보다, 그리고 일반대학이 전문대학보다 우월

< 표32 > 2023 회계연도 대학 운영손익 현황

(단위 : 학교 수)

학교급	지역	구분	학교규모			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일반	수도권	운영이익	22	20	22	64
		운영손실	2	0	0	2
	비수도권	운영이익	27	32	16	75
		운영손실	12	2	0	11
전문	수도권	운영이익	3	13	17	33
		운영손실	3	5	1	9
	비수도권	운영이익	28	24	12	64
		운영손실	10	6	1	17

(주) 학교규모: 일반대학: 소규모 5,000명 미만, 중규모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대규모 10,000명 이상
전문대학: 소규모 2,000명 미만, 중규모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 대규모 4,000명 이상
출처: 2023회계연도 재무자료를 기초로 "2024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의 지표 산식에 따라 계산

- 지방대학의 경상손익이 열위에 있는 중요한 원인은 미충원에 있고, 그것은 다시 구조화된 대학서열화에 기인

< 그림1 >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격차

(단위 : 원)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 대학재정의 악화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연구비 등의 격차를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

※ 일반대학 일인당 교육비는 국공립 수도권, 국공립 비수도권, 사립 수도권, 사립 비수도권의 순서

❖ 대학 재정여건 격차의 원인

- 대학 재정여건의 격차는 학부 재학생 충원을 차이, 대학원 등록금 수입의 차이, 기부금 차이 등에 기인
- 비수도권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이 향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충원으로 인한 대학재정의 압박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대학원생의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은 비수도권대학의 대학재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 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표33 > 2023 회계연도 대학별 평균 대학원 등록금 수입

(단위 : 백만원)

학교급	지역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일반	수도권	4,078(24%)	11,787(18%)	61,745(30%)
	비수도권	1,937(12%)	4,890(9%)	12,513(11%)
	차이	2,141	6,897	49,242

(주) 비율 : 대학원수입 / 등록금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 대학기부금도 수도권 대규모대학에 집중

< 표34 > 2023 회계연도 대학별 평균 기부금수입

(단위 : 백만원)

학교급	지역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일반	수도권	1,751	1,862	13,211
	비수도권	985	1,079	3,381
	차이	766	783	9,830
전문	수도권	1,012	375	425
	비수도권	110	189	300
	차이	902	186	25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V. 대학 서열화의 폐해 **채송화**

1 입시지옥 : 아이들의 삶을 집어삼킨 경쟁 시스템

❖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청소년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급증
- 한국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행복지수 최하위 수준
-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41.3%, 우울감 경험률 28.7%(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2)
- 2023년 아동·청소년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진료가 70~80% 증가
※ 강남구 9세 이하 아동 정신건강 보험료 청구 건수는 서울 25개 구 평균의 4배(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학업 성적에 따른 불안과 우울 : 일반고 56.9%, 특목·자사고 64% 호소
(사격세 설문결과, 2022)
- 0~17세 자살률 10만 명당 2.7명, 청소년의 10% 이상이 최근 1년간 자살 충동 경험
(통계청, 2021년 기준)

❖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입시 경쟁

- 고입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경쟁 : 영재학교 경쟁률 6.38%, 과학고 3.49%
- 고교 선택이 진로보다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교 선택으로 왜곡
- 중3 학생 수 감소에도 고입 경쟁률 실질 증가(4%)
- 조기 사교육 심화 : 4세 고시, 7세 대상 미국 초등 교재 활용 사례 확산

2 사교육 시장 확대와 공교육 황폐화

❖ 사교육비 폭증과 사회 양극화

- 2023년 사교육 총액 29.2조 원, 역대 최대(전년 대비 7.7% 증가)
- 사교육 참여율 80%, 주당 평균 참여 시간 7.6시간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9.2만원(전년 대비 7.2% 증가)
- 고소득층(월 8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는 저소득층 대비 월등히 높음
- 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 22.5%로 가장 큰 부담
- 조기 영어 사교육 급증 : 영어유치원 증가(2019년 615곳 → 2023년 842곳)
- 사교육 과열 → 교육 불평등 심화 → 계층 이동 저해 및 저출산 악화 악순환

❖ 입시 경쟁과 공교육 황폐화 부추기는 고교 정책

-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특목고·자사고 확대(2001~09)
- 자사고 폐지 예고(2019) → 존치로 정책 혼선(2023)
- 고교학점제(2025)와 자사고 존치의 모순 : 고입 사교육 증가 자극
- 성취도 자율평가 정보 공개로 서열화와 낙인 우려
- 고교서열화로 일반고는 황폐화, 학업 중심 교육 기능 상실

❖ 공교육 황폐화 실태 : 고교 교육과정 파행, 고3 교실의 공동화

- 공교육 목표 왜곡: 학벌 획득 중심의 교육으로 전략, 전인교육이나 다양성 교육 배제될 우려
- 교육과정 파행 운영: 정규 수업보다 입시 위주의 수업에 집중, 교육 본연의 목적 상실
- 윈터스쿨, 기숙형 독서실 등 방학마저 사교육이 성행하는 구도로 전환
- 수능 이후 고3 학생 학교 이탈 심화 : 등교율 3월 96.9% → 12월 57.3%
- 입시 일정에 따라 교육과정 비정상화, 학교 기능 상실

3 학벌주의 심화와 노동시장의 위기

❖ 학벌주의에 대한 국민 인식

- 여전히 학벌주의가 국민들에게 실질적 교육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국교위·KEDI, '24.04)
- 성인 5,000명 대상 교육현안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41.2%가 '과도한 학벌주의'를 한국 교육의 주요 한계로 지적, 이는 '대입 경쟁 과열 및 사교육비 증가(41.3%)'와 비슷한 수준

-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벌주의’ 지적(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24.04.15.)
 -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에서 학벌 중심 사회구조로 인해 공교육 불신 및 사교육 의존도가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
 - 블라인드 채용 방식 도입 이후에도 취업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7%는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85.2%(교육의봄·강득구 의원실, ’24.10.10.)
 - Z세대 취업준비생 1,107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취업준생*은 87%, 실제로 취업 준비를 쉬어 본 경험이 있는 비중도 67%(채용플랫폼 캐치, ’24.10.18)
- * 그 원인으로 1위는 반복되는 서류탈락(37%), 2위는 치열한 스펙 경쟁(20%)이 꼽힘

❖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

- 노동시장 진입 초기 최상위권 대학 졸업자는 최하위권 대비 24.6%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여 40~44세에는 최대 50.5%까지 확대됨(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 한국경제학회, 2023)
 - 상위 두 번째 그룹의 대학들의 졸업자들은 25~29세 때 9.53%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시작하고, 40~44세 때 39.65%라는 임금 차이를 보이게 됨
- 출신학교와 지역 등 개인의 신상 정보를 배제하고 능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교육부, 2025)
 - 교육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 33만 9,3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와 전공 계열에 따른 월평균 소득은 배가량 차이
 - ※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 1,000원으로 조사됨. 소득 구간으로는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절반가량인 49.5%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만 원~400만 원 미만(19.2%)이 뒤를 이음
 - ※ 반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257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9만 2,000원 증가함. 하지만 대학 졸업자보다 51만 4,000원이 적고 증가율도 3.7%로 대학원 졸업자 월평균 소득 증가율 8.6%보다 낮았음
 - ※ 월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경우는 509만 6,000원으로 조사된 대학원 졸업자임. 대학 졸업자보다 165%,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서는 198%가량 많았음

❖ 학벌주의에 따른 노골적인 차별과 비하 문화 확산

- 뉴스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입시 커뮤니티, 웹툰과 유튜브 등에 지방대에 대한 차별과 비하하는 댓글과 게시물 범람
- 지방대에 대한 일방적 혐오나 폄하 표현 심각, 극심한 경쟁 분위기 속에서 ‘구별 짓기’심화
- 지방대에 대한 혐오 표현은 약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병리적 현상, 지독한 학벌 사회에서 대다수 청년이 느낀 좌절감과 열패감이 또 다른 약자인 지방대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진단

❖ 학벌주의의 부작용

-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는 청년층의 불안과 경쟁을 심화시키며, 공정성에 대한 강박을 유발함
- 학벌주의는 한국 사회의 수직적 위계 강화,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함
- 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인식되어, 인성교육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됨
- 과도한 학력 중심주의 → 진로 다변화, 창의성 발현 저해
- 중하위권 대학 출신자의 사회적 상승 가능성 감소,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의 위축 → 지역 공동화
- 차별과 편견 고착화, 특정 대학 출신에 대한 우대, 타 대학 출신에 대한 차별, 연줄·인맥 중심 문화 형성
- 교육의 본질 훼손 및 교육 불평등 고착

❖ 학벌주의 심화가 초래하는 노동시장 시스템의 문제점

- 고용의 비효율성과 미스매치 심화
 - 기업은 학벌을 기준으로 채용하여 직무 능력과 무관한 인재 선발이 이루어짐. 결과적으로 현장 요구와 인재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직무 만족도·성과 모두 하락. 이는 전체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림
 - 청년층의 취업 미스매치, 직무 미스매치, 고학력 실업자 증가
 - 25%에도 못 미치는 특성화고 순취업률과 함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44.3%, 3년 뒤 50%로 증가, 2023년 일반고 직업반의 진학률도 61.8%
 - 임금·안정성 등 대졸보다 불이익이 큰 탓에 직업계고 졸업생들도 대학 진학으로 눈 돌리는 현실

- 노동 유연성과 다양성, 이동성 저하
 - 한 번 정해진 학벌 기반 경력 경로에서 탈출이 어려움. 이직·전직·재취업의 문이 좁아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약화되고 전환이 어려워짐. 산업 변화 속도에 비해 인력 전환이 느려져 경쟁력 저하
- 경쟁구조의 왜곡
 - 실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출신학교가 경쟁력의 기준이 되면서, 정당한 평가·보상 시스템이 붕괴됨. 이는 공정성과 신뢰가 약화된 비효율적 시장 구조로 이어짐
-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기업의 인재 부족
 -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집중 → 지역·계층 불균형 고착
 - 학벌 중심 문화는 대기업, 수도권 기업에 쏠림 현상을 유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역 산업 전반의 인력 공급 불균형이 심화됨
- 사회적 비용 증가
 - 학벌 중심 채용 문화는 사교육, 학력 과잉 투자를 유도하여 개인과 가정·국가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고, 생산가능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으로 이어짐

❖ 지방대학 몰락의 파급 효과, 지방소멸의 악순환

- 지방대 위기는 지역 소멸로 직결 : 지역 산업, 인구, 공동체 붕괴 가속
-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 도산은 지역 균형발전 저해
- 대학서열화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공동화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
- 대학 폐교 → 교직원 실직, 골목상권 붕괴, 지역경제 타격
- 폐교 시설 방치 → 지역 슬럼화 우려

※ (예시) 서남대(남원) : 교수·직원 300명 실직, 상가 40곳 중 35곳 폐업, 연 344억 손실
한중대(동해) : 부지 방치 및 우범지대화, 한려대(광양) : 공실 증가

4 지방대학의 몰락과 지방소멸의 악순환

❖ 지방대학 몰락

- 지방대학의 위기 및 수도권 집중 심화
 -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입학정원을 밑돌고 있음
 - ※ 2024학년도 정시에서 미충원 학과 대부분이 비수도권 대학이며, 2024년까지 지방대 미충원 인원 약 10만 명 전망
 - ※ 2021년 기준 지방대 입학정원 약 29만 명 → 1/3 이상 미달 우려
 -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 지역대학 정원 미달, 재정 악화
 - 비수도권 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재정 위기에 직면. 수도권 중심의 재정지원 및 정책 변동성이 지방대 위기 심화 요인
 - 지방 청년 감소 → 지역 산업·문화 지속 불가능성 초래
 - 최근 폐교 사례 다수 발생(한국국제대, 강원관광대 등), 대부분 지방소재.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 폐교 유형은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의한 강제 폐쇄와 대학 측의 자진 폐교로 나뉘며, 강제 폐쇄가 더 많은 비중 차지

VI. 대학 서열화 해결 방안

1 대학의 체제 개편

❖ 대학체제 개편의 전체적 방향 **임순광**

● 방향

- 대학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에 주력함. 대학의 격차는 대학 안 계열별 학부(학과/학문)별 격차, 개별 대학 간의 격차, 전문대와 일반대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간의 격차, 국립대와 사립대의 격차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대 중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간, 국립대와 사립대 간 격차 줄이기에 중점을 두어 논의함
- 대학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에 있어 100% 완벽한 제도가 있다거나 하나의 방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음. 격차 해소에서는 ‘수준’과 ‘단계’를 고려해야 함.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간 격차는 특히 좋은 일자리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히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다룰 것임
- 이와는 별도로 전문대와 일반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 공공성과 직업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가능하면 전문대학 무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대학 격차 해소는 대학 평준화를 통해 도달 가능함. 여기서 대학 평준화는 교육 내용 획일화가 아니라 대학별 교육 조건(특히 도서관, 강의·연구·학습 공간, 강좌 수, 학문 다양성 확보 등 교육·연구 환경, 교원 확보와 교원·교직원 노동조건과 처우 수준 등)이 서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대학체제 개편을 의미함. 따라서 대학이 탁월성 교육을 하는 곳이니 평준화가 불가하다는 식의 주장은 여기서 다룰 바가 아님. 또한 대학 평준화는 대학 격차 해소와 같이 ‘수준’과 ‘단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다만, 비용 절감과 수월한 진척을 위해 틀 자체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방식으로 잘못 짜면 안 될 것임
⇒ 탁월성이든 보편성이든 고등교육 조건의 보편적 상향에 초점을 둬. 이렇게 상향된 조건에서 같이 수학하고 졸업할 수 있는 공동선발-공동학위제 도입이 핵심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나왔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함
- 국·공립대 뿐 아니라 민립대(사립대)의 교육여건도 향상시키면서 연결(공동선발-공동학위 부여)하는 시스템을 대학통합(또는 연합)네트워크라 하고 여러 방식을 제안함. 이 대학통합

(연합)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대학에게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폭 지원하는 방식을 추구함
⇒ 대학 무상화 정책과 연계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국공립대와 민립대(사립대)에 등록금 (단계적) 무상화에 필요한 재원 지원과 각종 정부 자원 활용 우선권 배정 및 컨설팅 지원 등

-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대학 무상화 정책 또는 법안)을 전제로 하고 공동선발, 공동학위제를 기본으로 함.

※ 공동선발에서 세부 입학전형은 다양성을 떨 수 있음. 공동선발, 공동학위 부여는 구체적 제도 정비와 예고 기간 부여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해야 함. 예) 2025년에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계획으로 확정되어도 공동선발-공동학위제 시행은 몇 년 뒤에 해야 함. 그동안 관련 재정은 지원함

- 정책의 효과를 위해 처음부터 소수 대학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국립대학(거점국립대와 각종 국립대 포함)을 중심으로 준비하되 희망하는 사립대학도 포함하도록 함. 개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작더라도 많은 대학을 포괄하여 시행하는 것(틀은 올바르게 하되 지원은 낮은 수준에서 단계적으로)이 대학 격차 해소와 지역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됨. 소수 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은 틀 자체가 잘못 설계되었을 수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기도 힘들뿐더러 광역권역 내 지역 간 격차, 대학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고 여러 지역에서 대학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의의

-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사회 구성원들의 교육권을 더욱 보장함

※ 대학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별도 대폭 확대(타 교육 예산을 빼앗아오는 방식이 아닌 고등교육예산 확대)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 대학 무상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진행할 경우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 증진(차별 해소)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음

- 무한경쟁 승자독식 입시경쟁 교육의 폐해 극복에 도움을 줌

※ 김누리 교수는 한국과 같은 입시경쟁교육을 야만이라 규정함. 독일에서 이런 식의 경쟁교육이 결국 독재와 파시즘을 불러왔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독일이 협동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강조하며 현재와 같은 대학 평준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음

※ 여타 입시경쟁교육의 폐해 극복에 도움이 됨: 경쟁과 차별의식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가 아니라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하여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협동교육, 창의교육으로 공동체 구성과 자아실현 지원에 도움이 됨. 또한 자살, 정신적 어려움, 혐오, 차별, 각종 질병(특히 위염-사교육 시간에 쫓겨 패스트푸드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다수임-과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임

- 과도한 사교육비, 공교육 위협 요인 해소에 기여함

※ 미친 대학 등록금과 미친 사교육비 그리고 7세 고시와 4세 고시 등에 대한 지적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자주 있어 음. 대학 간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교육비, 공교육 붕괴, 교실 현장 파괴,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

- 특정 대학 학벌의 사회적 신분(파워엘리트)화 방지에 기여함

- 지역 민립대 역량 향상과 지역 인재 유출 축소로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을 줌

※ 우수한 교수진과 열정적인 학생이 있어도 대학 격차 구조로 인해 뜻을 펼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지역의 인재들이 많음. 소위 지잡대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지방대(국립대 포함)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차별적인 사회적 시선을 받고 있고 취직을 할 때도 차별을 당하기 일쑤임. 이로 인해 많은 지방대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며 재수를 하거나 편입학을 준비하고 있어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큼. 일부 대학은 학생 총원 미달 등으로 폐교하여 지역 붕괴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은 악순환은 사회 구성원의 권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민립대를 포괄하는 대학통합(연합)네트워크 구축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특히 대학 무상화 관련 재정 지원)으로 지역 대학들의 교육·연구 역량 향상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과장된)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을 넘어 공평으로, 균등(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됨

● 구조와 경로

해외 사례 대학 평준화 수준은 다양하고 여러 유형이 있음

- ① **(독일의 대학)** 국립대학(96%)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4%)으로 나뉘며 일반 사립대학이 없음. 각 대학 간에는 서열이 없고 평준화 되어 있음. 아비투어를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아비투어 제도는 변화해 왔지만 큰 틀에서 평준화의 성격은 바뀌지 않음. 학비는 무상임. 학생 수당도 줌. 세계대학 평가에서 독일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대학이 뮌헨대학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보면 뮌헨대학을 절대 우위에 있는 명문대학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독일에는 그러한 명문대학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님. 최정상에 있는 하나의 대학에 전국의 최우수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은 없음
- ② **(프랑스의 대학)** 크게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과 바칼로레아 취득자가 진학할 수 있는 대학으로 나뉨. 그랑제꼴은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가 창립한 전문직(엘리트) 영역에서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것임. 이공계엘리트 양성인 종합기술학교, 국립행정학교, 고등상업학교, 고등사범학교 등이 있음. 국립행정학교는 엘리트 정치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노란조끼 운동 이후 폐지됨. 그랑제꼴에 진학하려면 바칼로레아 학위 소지자가 고등 준비급에서 1~2년 입시 준비 교육을 받은 후 입학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함.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시험에 합격하면 정원제 학과 이외에는 지원하는 대학과 지원하는 전공학과에 입학이 허가되는 구조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의 대학들은 상당히 평준화되어 있음. 2007년 사르코지 정부는 대학 간 협력을 가속화하여 2006년~2012년에 연구·고등교육 기관 연합을 26개 설치하였음. 이 조직은 여러 고등교육기관과 공공 연구기관이 각각의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목적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2013년에 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기관 및 공공 연구기관들의 협력과 대형화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대학연합 설립도 확산하고 있음. 각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대학과 연구소의 상위에 대학연합을 관장할 거버넌스 기구를 새로 만든 형태임. 대표적 대학연합은 프랑스 남동부의 그로노블-알프스 대학연합임. 2014년 그로노블의 3개 국립대학, 그로노블 공과대학, 그로노블 정치학교, 그로노블 건축학교, 시부아-몽블랑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과 국립과학 연구센터, 그로노블 원자력 연구소 등이 연합하였음

2016년 그로노블시 3개 국립대학은 그로노블-알프스 대학이 되었음. 마크롱 정부 들어서는 시범 공공기관의 형태로 통합대학이 되었음. 2018년 마크롱 정부는 ‘시범 공공기관’을 도입하여 대학통합을 추진하였음. 이 제도의 핵심은 ‘대학연합’ 외 다양한 형태의 통합 실험을 10년간 지원하는 것임. 특기할 만한 점은 이런 통합 실험을 하다 중단하여도 패널티를 주지 않는다는 것임

③ **(핀란드의 대학)** 헬싱키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있긴 하지만 명문대가 따로 존재하진 않음. 대학 연합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육문화부 주관으로 핀란드 남서부 7개 대학과 핀란드 공업협회, 핀란드 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하는 기술네트워크 대학이 2017년에 출범함. 알토대학교, 오울루대학교 등 7개 대학이 참여하는 FITECH(The Finish Institute of Technology)는 석사과정 중심의 대학원 테트워크로 시작했음. 2020년부터는 일반인 대학 학부 과정도 확대되고 있음. 지역 대학 간의 활용 가능한 협력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④ **(미국의 대학)** 네트워크의 결합력에 따라 컨소시엄형, 연합형, 통합형 대학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구성됨. 연합형은 컨소시엄형보다 결합 수준이 강화된 것임. 대표적 연합형 네트워크 예는 위스콘신 사립대학 연합임.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비영리 사립대학교들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연계한 조직체임. 위스콘신 연합은 30개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모범 사례 및 지적 자원을 공유하는 역할을 함. 대학이사회에서 각 분야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함. 입학, 학사, 경영 등과 같은 주요 기능과 관련한 전문 인력 및 전문 역량을 공유하고 회원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두고 운영진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함. 연합형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통합형으로 캘리포니아 모델이 있음. 다수의 대학을 하나의 주립대학체제로 통폐합한 것임. 1960년대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진학률은 60%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30여 개의 주립대학은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경쟁력이 낮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를 개혁하기 위해 1960년~1975년에 고등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추진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주립대학체제를 형성함. 캘리포니아의 대학을 3개의 대학으로 개편하여 각 대학의 독립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일관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교육력을 발전시킴. 캘리포니아 모델은 4년제 연구중심대학 10개교, 4년제 교육중심대학 23개교, 2년제 대학 113개교로 구성됨.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UC Berkeley, UC LA, UC San Diego 등 유명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립대학 시스템임

- 하지만, 각 나라의 대학 평준화 수준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옳은지, 제대로 평가한 것인지, 한국 현실에 맞는지는 엄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평가도 다양함. 다른 나라 모델의 단순 이식은 불가능함. 우리나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대학체제, 한국형 대학통합(연합)네트워크 방안이 필요함. 이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학통합(연합)네트워크가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① 대학 상향 평준화를 위한 교육 재정 관련 주요 변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정화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공론화 및 수차례 법안 발의
- 국립대 기성회계 등 회계 통합
- 반값등록금 시행
- 사립대 회계감사 시작, 적립금 사용 내역 2025년부터 공개
- 지자체가 대학 재정 지원 가능

② 대학 간 네트워크 확대

- 국가거점 국립대 학점교류제도
- 거점국립대학교(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제주대, 경상대)끼리는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수학이 가능한 제도
- 수학장려금(학교에 따라 15학점 이상 성적 3.0 이상일 경우 40~50만원 지원)
- 타대학에서의 '전공'이수도 본교 학과장이 승인시 가능
- 원격수업 학점교류 시스템(2022에 서울대도 동참)
- 자원공유대학론(일부 기자재, 시설 등도 공유하자는 주장)

③ 대학 내 이동 확대와 전문성 강조되는 분야 전문대학원화

- 1) 자율전공학부 제도
 - 대학마다 차이 있으나 대체로 1학년 자율전공부 교양 수업, 2학년때부터 지원한(또는 선발된) 학과 생으로 수학 후 졸업
 - 대학네트워크에서 자율전공부처럼 공동선발하더라도 어려움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2) 전문대학원제도 활성화
 - 고등교육법 제29조2(대학원의 종류): 전문 직업분야(국가자격 및 직업 자격 관련 분야, 정부 부처 인력 양성 분야 등)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7개 전문대학은 각각 별도 법령도 있음(경영-금융-물류/법/의학-치의학-한의학)
 - 많은 대학에 다양한 전문대학원 존재(2024년 기준 서울대 12개)
 - 공동선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공통교과목 이수를 하고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는 분야는 전문 대학원 진학을 유도할 수 있음

- 최근의 대학통합(연합)네트워크 방안들에 대한 간단한 검토를 통해 대학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2004년 정진상 교수의 제안 이래 2010년대에 여러 안들이 각축을 벌였고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일부 수렴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점차 수그러들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대선 과정에서 5가지 정도의 안이 각축을 벌이고 있음

① 서울시교육청의 대학 공유 네트워크 구축방안

- 1단계 : 10개 거점 국립대학 통합. 통합 대학 내 공동학위제, 교수, 학생 자유 이동 등
- 2단계 : 거점 통합대학과 해당 지역 지방 국립대, 공영형 사립대가 권역 네트워크 구축
- 3단계 : 네트워크화된 대학들 간에 공통교양과정 운영, 학점, 학생, 교수 등 상호 교류

②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로드맵

공동입시, 전폭적인 재정지원, 학점 교류, 교육 자원 공유를 통해 교육효과 극대화, 대학서열 해소				
		1단계(2025년)	2단계(2030년)	3단계(2035년)
입시		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해 성적 기준 설정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 성적 기준 요구	고교졸업-대학 수학 최소 자격 요구
네트워크 범위		국공립대+사립대 40개 대학	국공립대+사립대 80개 대학	국공립대+사립대 160개 대학 이상
재정지원 /교육의 질 제고		학점 교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 등 교육 자원 공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OECD 수준의 교원 확보) 학문 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 활용 반값 또는 무상 등록금, 대학 경상비 지원		
예상인원	수험생	39만명	40만명	36만명
	정원	10만명(25.6%)	15만명(37.5%)	25만명(69.4%)

③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대선 공약, 2025)

- “지방에서도 연구하고 박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여기서도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비슷한 것 10개...” - 이재명 대선 후보 연설 중
- 수도권 1극 체제 타파,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서열화된 대학들의 독점적 지위 깨기. 국가 균형 발전을 내걸고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의 거점국립대 9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임. 이를 통해 지역의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고 지역 대학들이 동반성장의 중심축이 되도록 한다는 것임. 서울대 10개 만들기 는 이재명 정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임. 서울대를 중심으로 서열화 된 대학에 독점적 지위 깨기 위해 거점 국립대의 1인당 학생 교육비를 서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인데, 대학알리미(2023년) 자료에는 서울대 1인당 학생 교육비는 6천59만원, 거점국립대 1인당 학생 교육비는 2천450만 원임을 알 수 있음. 즉, 이 정책 시행에는 최소 3조 원 정도가 소요됨(1개 거점국립대 당 3천 억원 이상 소요). 다만, 공동선발, 공동학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건지 구체적 계획은 안 보임
- 이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근본적이지 않다는 비판에서부터 지방대학 100개 죽이기, 서울대라는 욕망에 편승한 대중요법, 서울대만큼 줄 예산이 없다는 점을 숨긴 비현실적인 선언(2025년 세입예산 기준 서울대는 약 1조 1천억 원, 부산대는 약 3천 4백억 원으로 거점국립대 1개 교당 3천억 원이 아니라 7~8천억 원씩 지원해야 되므로 매년 7조 원 이상 필요), 공동학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이나 라이징 사업처럼 특정 대학 몰아주기와 유사정책, 공동학위를 부여하더라도 표식이 되면 효과 상실, 계열간 격차 해소에 대한 내용 부재, 입시제도 개선은 없고 서열 10위권 학벌과두제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함과 같은 다양한 비판이 제기됨. 물론 이와 같은 비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 바 큼. 만약 실행을 하려면 정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구체화 한 뒤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임

④ 민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대선 공약, 2025)

- 심상정 의원이 대표로 있을 때 만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이어서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하고 공동선발, 공동학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주축을 이룸. 재원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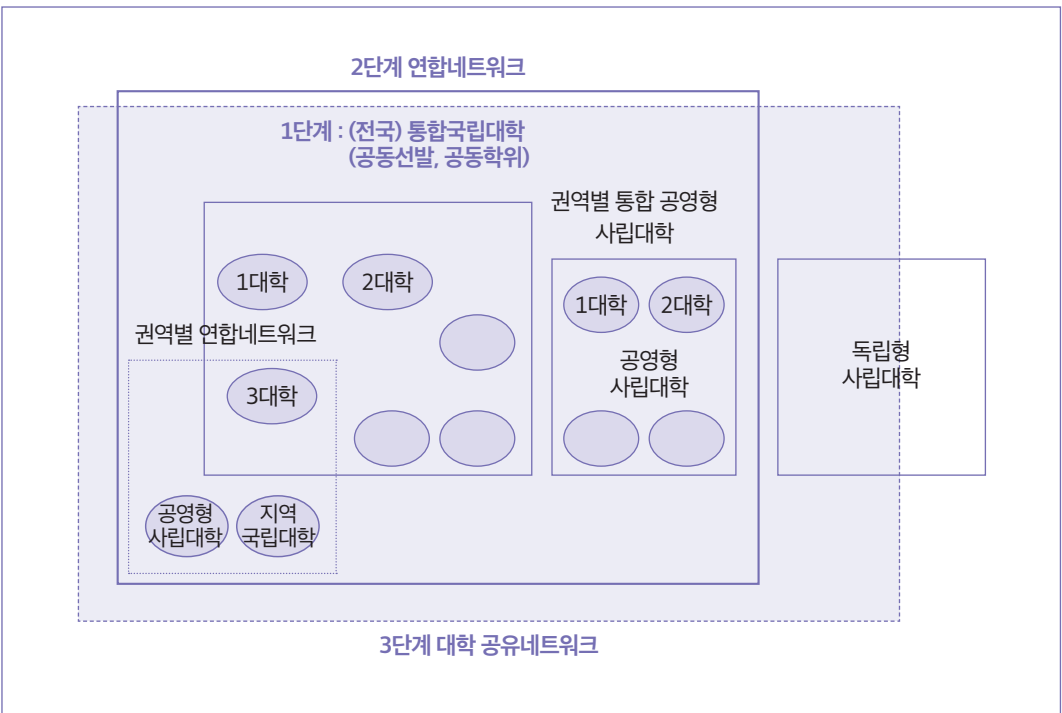
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지역연합대학과 대학통합(연합)네트워크 방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대학들에 재정을 전폭 지원하면서 대학 무상교육과 대학평준화를 연계하여 대학 회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대학의 상향 발전(대학 격차 해소)을 이룬다는 설계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공립대통합(연합)네트워크 결성, 공영형 사립대나 희망 사립대를 네트워크에 포함, 공동선발-공동학위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함. 포함되는 대학의 수나 재정 지원 규모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지역연합대학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함. 하나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대학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임. 다른 하나는 지역교육 주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회도 지방대학 살리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임

지역연합대학 구성 방안

- 지역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합대학법인을 구성함(광역 단위로 2개 구성)
- 지역연합대학 체제에는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가 참여함
- 연합대학의 구성 방식은 공모 또는 정부,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함
- 연합대학은 공동학점, 공동학위로 운영하고 공동선발 제도를 도입함
- 지역연합대학을 중심으로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연구소와 산업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도시(타운)를 구성함

< 그림2 > 대학체제개편안=대학 상향 평준화 방안



- 실현 경로 제안

※ 앞에서 거론한 5개의 안 모두 국토 균형 발전과 학벌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간 있었던 제도적 변화나 공론화 양상을 보면 대학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사회 구성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취지도 나쁘지 않음. 다만, 지금까지 제안된 안들을 중심으로 각 안의 주요 제안자들이 참여하여 심화·평가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상충의 논의에 기대어 바로 집행에 들어간다면 심각한 오류나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으므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가동시킬 필요가 있음. 시민공론화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특위와는 다른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임. 연금개혁이나 핵발전 관련 숙의과정을 떠올리면 될 것임

대학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방안에 대한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가동

- 주요 안을 제출하고 활동하는 단위의 담당자들을 발제자로 하고 각계 각층의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3개월 이상 거칠 필요가 있음
- 공론화위원회에서 숙의한 내용을 TV, 유튜브, 팟캐스트, 언론 지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것임
- 이를 바탕으로 집중 논의 과정을 거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합의회의’의 방식으로 제도 설계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제도를 집행해 나감
-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대학 격차 해소, 지역 격차 해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족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통합의 정도가 약간 느슨하더라도 틀을 제대로 갖추고 다듬어 가는 과정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야 최대 주의와 최소주의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음
- 중앙에서의 설계와 제도 집행이 시작되더라도 지역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과정이 진행되어야 함. 지역연합 대학 법인을 구성한다거나 그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정부, 지자체, 대학, 교육주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회의로 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정부는 출자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경제, 연구, 기후, 교육, 문화, 행정 등 지역 운영에 기초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연합대학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임. 더 나아가 기업이 지역대학 출신을 많이 채용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우대해 주는 방법을 첨가할 수도 있을 것임
- 대학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 평준화, 대학통합(연합)네트워크로의 대학 체제 개편은 몇 개 대학에 재정을 몰아주거나 별도의 서열을 추가로 만들거나 일부 취업 관련 계열에 집중지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살고 학문생태계가 온전히 보전되면서 대학의 역량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으며 과도한 격차와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고등교육 재구조화와 복선형 체제 도입 **남성희**

● 현황 및 문제점

- (단선형 교육체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
⇒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수요증가 등의 상황에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라는 위계적·단선적인 형태
- (기능 중복) 고등교육기관 설립목적의 혼재로 다수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 관련 중복학과를 개설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입직시기를 늦춰 사회적자본의 낭비와 입직 시 임금 및 승진의 차별요소로 작용함

※ 기관 간 정체성과 경계가 모호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혁신과 발전에 걸림돌이 됨과 동시에 전문대학 출신이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큰 상태임

* 일반대학 총 114개 대학(원) 520개 학과에서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를 개설하여, 2~3년에 마칠 수 있는 과정을 4년으로 연장하여 교육과정 편성

- (수업연한·교육과정 제한)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은 4년제, 전문대학은 2~3년제로 수업연한을 제한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심화 지식과 기술을 취득하기에 한계가 있음
- (대학의 종류에 따른 역할 분담이 미흡)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종류를 정체성이나 특성화로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교육부의 관리체제 밖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어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각종학교, 사내대학

- (해외 주요국 동향) 고등교육을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수평적 2트랙 체제로 유지하며, 산업계의 기술변화 및 발전에 따라 직업교육기간의 학제가 자유로움

※ 2년 → 4년 → 6년(기술석사) 추세

● 개선책

-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 고등교육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 등으로 재구조화할 필요

① (학문·연구중심대학) 학부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육성

② (직업교육중심대학) 직업교육을 목표로 희망하는 일반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등을 포괄하는 실무중심의 학문 체제로 개편

※ 1) 전문학사를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 2) 학사학위 및 전문기술석사 등 각 산업분야의 고도화·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재양성 범위를 확대, 3) 추후 기술박사과정도 도입 필요

③ (기타 교육중심대학) 일반대학 중 직업교육보다는 인문·사회·교양학부 중심의 교양교육(liberal arts)을 원하는 대학과 대면실험 실습이 어려운 원격대학들이 포함되어 고등교육 실시

- (직업교육법 제정) 가칭 직업교육법(교육기본법 제21조 관련)을 제정하고, 하부 항목을 구체화하여 학교급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직업교육 기관의 범위·역할·내용·거버넌스를 반영한 주체의 책무성 확보와 직업교육강화가 필요

- (복선형 학제 도입)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단선형 교육체제를 융합적이고 다양한 복선형 교육체제로 개선하고 관련 학제를 신설

⇒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수평적·수직적 이동이 자유로운 복선형 체제하에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학력·경력 이동과 창의융합 역량취득 보장 필요

- 개선효과
 - 전문대학 출신에 대한 낙인효과 및 직업교육 경시 풍조를 완화하여, 사회 양극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계층 사다리를 확보해 줄 수 있음
 - 전문직업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역량 강화로 산업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학력 유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 가능

❖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건 **양영우**

- (첫 번째 조건) 고등교육 재정의 전면 재설계
 - 고등교육의 정부 재정지원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초중등과 대학의 재정 지원 불균형이 심함
 - 초등생은 OECD 대비 130.4%, 중학생은 124.1%, 고등학생은 138.1%, 전문대는 47.4%, 일반대는 69.1% 수준임(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1.1% 확보는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1995년) 당시부터 과제였으나 현재도 0.6%에 그치고 있음(OECD 평균은 1.1%)
 - 따라서 정부가 교육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OECD 수준으로 상향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대학의 전면 재구조화를 유도해야 함
- (두 번째 조건) 투 트랙 평가 및 지원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평가를 이원화하여 국공립대는 국공립 리그로, 사립대는 사립대 리그로 평가 대상을 달리하여야 함
 - 즉, 국공립대는 국공립대 간, 사립대는 사립대 간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지원 방식을 달리하여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재처럼 글로벌 사업이든 라이즈 사업이든 국공립과 사립대를 같은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 사립대는 정부 재정지원이 미약하므로 동일 재정사업을 국공립대와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 (세 번째 조건)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전환
 - 미래지향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교육부는 중앙 통제형 규제·포지티브형 규제로 전공과 학사가 비슷비슷한 대학을 전국에 양산하는 대량 교육 시대의 정책을 고수함

- 그 결과 고등교육은 급성장하였으나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확장주의 정책은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고등교육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
- 자율과 창의가 중심인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에는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함

● (네 번째 조건) 정책의 안정성·지속성·예측가능성

- 역대 정부마다 바뀐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의 발전과 성장, 미래 설계에 허들이 되어 왔음
 - ※ (예시)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2009~2013),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2008~2013), 광역경제권 선도사업(2009~2010),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012), 지방대 특성화사업(2014~2018), 학생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2014~2018),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2014~2016), 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 대학혁신지원사업(2019~2021), BK21 사업(2013~), 글로벌 사업(2024~), 라이즈 사업(2025~)
 - 각종 사업은 정권 성향에 따라 분절적·한시적으로 진행되어,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특성화 강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음
 - 따라서 고등교육 재정사업은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그 프레임을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함
- (다섯 번째 조건) 대학입시의 단계적 완전 자율화
 - 대학입시는 대학 서열화의 최초이자 마지막 퍼즐임
 - 입학 성적에 따른 서열화는 ‘인 서울’과 ‘아웃 서울’의 격차를 더 심화하고 있으며, 졸업 후 진로에서도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음
 - 현행 입시를 단계적으로 완전 자율화하여 대학이 창학이념과 학생 수요에 따라 자율적인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여야 함
 - 즉, 연간 25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 초저출생 시대에 ‘오지선다형’ 고르기 수능을 치르고, 일부 수도권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2 다각적 재정 지원

❖ 대학재정 확충과 대학 서열화 문제 **채희울**

- 대학재정 확충은 대학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대학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
- 지방소재 일반사립대학과 전문대학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학의 재정여건 개선은, 대학 서열화와 대학 재정 여건 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면서 대학 서열화 고착화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
- 이 방안은 다시 고등교육예산 확충, 대학 구조조정 촉진 및 대학 자체적 재정 확충으로 구분

❖ **고등교육예산 확충** **채희울**

-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매우 취약
 -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1,387US\$(PPP 기준)로 OECD 평균의 64.3% 수준이고 G7 평균의 50.4%에 불과(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3)
 -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를 100으로 할 때 중등교육비는 128, 고등교육비는 84.6에 불과
 - ※ OECD 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초등교육비 100, 중등교육비 114.9 고등교육비 179인 것과 뚜렷한 차이
- 고등교육예산 지원이 불충분한 것이 고등교육비 부족의 일차적 원인
- 따라서 고등교육예산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예산 편성에서 다른 교육예산은 큰 변화 없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
 -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교육예산에서 초중등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이고 고등교육예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
 - ※ 고등교육특별회계에서 국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액 제외한 금액의 50%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점차 100%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출금의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20.79%)의 일정 부분을 고특회계로 전입 등

❖ **대학 구조조정 촉진** **채희울**

- 대학 통폐합, 학과·전공 재조정 등 구조조정은 한정된 고등교육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대학 구조조정은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 사립대학과 중소규모 대학들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대학당 정부재정지원을 증가시키는 효과
- 대학 구조조정은 향후 5년 정도가 골든타임
 - 5년 이내 퇴직 교원이 다수 발생함으로써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이 수월한 환경 형성
 - 자유전공제 확대를 통해 학과 또는 전공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촉진
-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우선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도입
 - 회생 가능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적립금 활용 및 재산 처분 기준 완화
 - 통폐합 또는 폐교 직면 대학의 경우 잔여재산 중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장려금으로 지급(부정/비리 발생 시 제외)

- 학교법인 청산으로 잔여재산 국고귀속 시 사학진흥기금으로 편입해서 사립대학 발전 용도로 사용
 - 특정 대학이 폐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재산가치가 급락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구조조정 대상 선정 시 충분히 감안할 필요
- 대학 간 학부 단위 양도·양수 허용
 - 경쟁력 없는 학과(전공)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폐과보다는 다른 대학에 양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책
 - ※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은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추진할 필요
 - 대학 간 학부 단위 양도·양수 허용에 관해서는 일본 사례 참조할 필요
 - ※ 일본의 경우 2019년 5월 「사립학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부 설치자 변경 절차”만으로도 사립대학 간 학부 단위 양도를 통한 통폐합을 허용
 - ※ 한국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 학령인구 급감, 지방 중소 사립대의 경영위기 심화 등 현상이 일본 대학 구조개혁의 배경

❖ **대학 자체적 재정 확충** **채희울**

-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이는 다시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 확대, 규제 완화로 구분 가능
 - 교육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은 전체 조세지출 중 1% 정도에 불과하므로, 고등교육에 대한 조세지출을 늘리도록 조세정책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
 - ※ 조세지출이란 특정분야의 조세 우대 또는 감면을 의미하는데 교육분야의 조세지출은 감소하는 추세
 - 윤석열정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아직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
 - ※ 등록금 책정 자율화 확대, 대학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등
- 대학 자체적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세지출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 현재 학교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을 학교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용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비가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양도차액을 교비회계에 전출하지 않고 법인회계 내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 토지 등 저수익성 재산을 건물 등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하여 대학 수익 증대를 유인하기 위해 양도차액을 교비회계에 전출하지 않고 법인회계 내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도록 할 필요

- 기부금 비과세

- ※ 기업의 대학에 대한 법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을 100% 인정하던 조세특례법상의 한시적 특례규정이 폐지되고, 2011년 1월부터 기업 및 영리법인의 법정기부금 손금 인정이 50%로 대폭 축소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감소됨
- ※ 2011년 이전과 같이 사립대학에 대한 법정기부금 손금 인정을 100%로 인상할 필요

● 반값등록금 규제의 폐지

- 반값등록금 제도 시행 이후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줄었으나 대학 경상지출 중 보수와 연구비 비중이 줄어들어 대학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에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자체노력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연계하는 한국장학재단의 기존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을 수정
 - ※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으로 두고 있는 i) 정보공시 상 평균등록금 전년 대비 인하 또는 동결 ii) 전년 대비 1인당 교내 장학금의 유지 또는 확충 등 두 가지 조건 중 ii) 조건만 유지하도록 개선
 - ※ 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자체를 폐지하고 I 유형과 통합
- 대학 등록금의 전면적 자율화(「고등교육법」제11조에 의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포함한 등록금 책정 방식에 관한 규제 폐지)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둘 필요
 - ※ 아직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지 않은 실정
 - ※ 등록금 전면적 자율화는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학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

● 대학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 대학 내 설치 가능한 업종 규제 완화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를 원칙은 허용, 일부 불허 방식의 규제(Negative 방식)로 전환
- 대학교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재고
 - ※ 교육당국은 대학교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에 관하여 전수조사한 후 개발제한 지역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경우 지정 해제를 추진
-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지방사립대학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 대학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대학 무상교육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기본 구축 박은경

- 대학 간 격차 해소는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함.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을 확대해야 함. 확대된 교육 재정은 지금까지 학생에게 부담시켜 온 교육비용을 없애는 쪽으로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대학 무상화(무상교육 달성)라 함
- 대학 무상교육 달성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교육비용이 궁극적으로 0으로 되는

것을 의미함. 학생 부담 교육비용의 예로는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생활비(학생수당) 등을 들 수 있음

※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수당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시점에서 모든 교육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연구의 한계가 있고, 모든 교육비용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좀 더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여기서는 등록금과 OECD 기준의 1인당 공교육비를 중심으로 제안함
- 교육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은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공적 기능이나 사립대학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뒤에서 언급되지만 많은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 및 여러 헌법과 법률에서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입장은 매우 분명하게 담겨 있음
- 그런데, 교육 공공성은 교육 경비의 공적 책임성, 교육 기회평등성, 교육 목적의 이행성(교육기관의 정체성)의 세 가지 측면을 실현하는 데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2년 기준 청년층(25~34세)에서 69.6%, 성인층(25~64세)에서 52.8임. 이는 OECD 평균 청년층 47.2%, 성인층 40.4%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하지만 정부 재원은 그 반대로 매우 적은 편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공교육비 비중은 OECD 평균이 GDP 대비 1.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7% 수준에 불과함. OECD 평균 민간부담은 0.5%지만 한국은 0.9%에 이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격차는 조금 더 클 수 있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늘어났지만 이는 정부 총지출(6.9%), 교육부 지출(6.2%)보다 낮은 수치임.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증가로 대학이 체감하는 실질 고등교육 재정 지원 예산은 감소하였음. 또한 초·중등교육부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이 되는데 비해 고등교육부문은 관련 재정지원법이 없는 상태라 더 불안정한 상태임. 교육 경비의 공적 책임성이 약한 것임
 - 대학 간 정부 재정 지원은 불평등하여 특정 대학에 지원 집중,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불평등 지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불평등 지원 양상이 분명하게 나타남. 교육부 및 교육부 외 타 부처의 대학 재정 지원이 상위 10개 대학에 집중(교육부 전체 지원액에서는 25% 내외, 교육부 외 타부처 지원액에서는 40% 이상 차지)되어 있음.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포항공대가 1억 2,408만 원이었는데, 2022년 재학생 5천 명 이상 일반·교육대학에서는 서울대가 5,804만 원으로 가장 많았음(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2023년). 서울 주요 15개 교 평균액은 2,250만 원이었고 지방거점국립대 9개교 평균은 2,230만 원, 국공립대

38개교 평균은 2,011만 원으로 국공립대가 서울 주요 대학 평균보다 낮았음. 타 부처 지원의 경우 수도권 대학 1개 교당 평균이 136억 원이었는데 반해 지방대학은 1개 교당 54억 원 수준에 불과하였음.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일반대학은 68%이고 전문대학은 46.6%로 큰 격차가 났음(강득구 의원실, 2020년). 전문대학의 일반지원은 4,661억 원이었는데 2020년 서울대는 4,860억 원을 지원받음. 일반대학은 4조 7,720억 원을 지원받아 전문대학 지원액보다 10배가 넘었는데 전문대학의 학생 수가 일반대학 학생 수의 30% 정도임을 감안하면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전문대학에는 일반대학보다 저소득층 자녀가 더 많이 입학하는 경향이 있는 걸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교육 기회의 평등성이 약한 것임

-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각각 그 목적이 다른데 오래전부터 그 목적이 안 지켜지고 있음. 이는 취업 위주 인기 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학생충원률을 높여 등록금을 통한 재정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대학의 판단이나 교육부의 교육 목적 이행을 저해하는 대학평가정책의 영향 때문임. 그 결과 많은 대학에서 기초학문, 인문학의 축소가 이루어졌고 전문대가 맡아야 할 전공이나 학과를 일반대학이 개설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대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대학 본연의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대학 재정의 압박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대학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상업화와 함께 정규 교원의 축소, 비정규 교원 양산, 법적 교원 외 열악한 처지의 비교원-비전임 교수 양산, 직원 충원을 저하, 양질의 자료 확보 노력 부족, 강좌 개설 축소, 콩나물 교실 운영 등 고등교육 여건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음. 이는 교육기관의 정체성 약화임
- 앞에서 언급한 교육 공공성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교육 경비의 공적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머지 측면의 실현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대학 무상화 방법에 대해 제안할 것임

● 대학 무상교육의 실현 방향과 방식

- 먼저, 등록금과 학생 수를 고려한 등록금 전면 무상화를 OECD 평균 수준 확보를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실질 GDP는 약 2,292조 원임. OECD 평균 기준 1%의 금액은 22조 9천억 원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고등교육 예산은 14조 3,649억 원임. 이 중 국가장학금이나 지방교육재정에서 빼 온 예산 등을 감안하면 실제 안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고등교육 예산은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음.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최소 매년 10조 원 이상의 추가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해야 OECD 평균에 근접할 수 있음
-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단계적 대학 무상화를 주장할 수도 있음. 이 경우 현

행 국가장학금(약 4조 7천억 원)을 고등교육재정 지원 예산으로 편입하고 편입한만큼 대학 등록금을 줄여나가는 방식(구 정의당 22대 총선에서 계산),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첫째 해 50%, 둘째 해 75%, 셋째 해 100% 지원)하여 달성하는 방식(진보당, 22대 총선), 전문대학부터 무상화하는 방식(국가장학금 전문대분 1조 원+약 1조 5천억 원 추가 소요, 강문상 교수, 2021), 국립대학부터 무상화하는 방식(7천 억원 추가 소요, 구 정의당 22대 총선에서 계산), 지방대학부터 무상화하는 방식(3조 6,271억 원 소요, 구 정의당, 22대 총선에서 계산), 국립대와 전문대 전액 무상화와 사립대 반값등록금 방식(약 4조 7천3백억 원,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약), 국립 일반대와 전문대 및 지방사립 일반대부터 무상화하는 방식(4조 9,864억 원 소요 예상)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만, 등록금이 사립대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임.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어 등록금 의존도가 낮아짐. 따라서 등록금만 충당한다고 무상교육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음
- 더 중요한 기준으로 OECD 평균 1인당 공교육비를 기준 목표로 정할 필요가 있음.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으로 설정하여 산정하면 총 교육비가 2020년 37조 9,710억 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7년에는 30조 9,239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보았음. 이는 일반대, 전문대 재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추정치까지 포함한 수치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이 GOP 대비 1.3~1.4%(2024년 우리나라 실질 GDP가 2,300조 원에 가까우므로 31조 원에 근접하기 위한 비율)가 되어야 함. 목표를 이로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도 함

● 대학 무상교육의 실현 방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여러 방안이 존재할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처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 것임. 그 안에 담길 내용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방향은 분명하게 공공성 확보 차원으로 잡되 그 실현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만들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하고 정부가 추진하여 교육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대학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임. 목적, 제안이유 등 자세한 이유는 지면 관계상 생략함. 경과만 보아도 충분히 논의가 숙성되었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발의 현황만 제시함. 19대 국회에서 한명숙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하였음

< 표35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발의 현황

번호	발의 일자	발의 의원	비고
1	2004.11.04.	박찬석(열린우리당) 등 41인	- 17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	2009.02.05.	신학용(민주당) 등 10인	-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 - 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3	2009.11.13.	김우남(통합민주당) 등 13인	- 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4	2009.11.23.	임해규(한나라당) 등 16인	- 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5	2011.06.07.	권영길(민주노동당) 등 10인	- 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6	2012.05.30.	한명숙(새정치민주연합) 외 126인	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7	2012.06.13.	정진후(진보정의당) 등12인	- 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8	2013.07.03.	정우택(새누리당) 등 13인	- 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9	2016.12.26.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10	2017.03.20.	윤소하(정의당) 등 10인	-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11	2017.10.10.	안민석(더불어민주당) 등 11인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12	2021.10.27.	서동용(더불어민주당) 등 9인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대학 무상교육 달성(무상화)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크게 대학 정체성 회복과 기능 활성화, 출발점에서의 평등 실현, 다양한 차원의 공적 편익 증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대학 정체성 회복과 기능 활성화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그동안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관료 집단의 기준으로 줄 세워 온 각종 대학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됨
 - 각종 대학평가 기준, 특히 수도권 대학과 기존 학벌 상위 대학에 유리한 취업률, 입학률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적 재정 지원으로 인한 대학 격차 확대를 중지할 수 있음
 -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적립금으로 과도한 주식·부동산 투자(투기)를 하거나, 대학 공간과 시설 사용비 부과나 각종 수익 사업을 확대하거나, 등록금 인상과 등록금 외 각종 학생 부담 교육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대학의 상업화와 기업화에 제동을 걸 수 있음
 -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교수와 교직원을 평가 관련 업무에 과도하게 내몰거나, 평가 관련 업체에 컨설팅을 맡겨 재정을 낭비하거나, 대학 현실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식 계획 제출과 이행으로 중장기적 대학 발전의 전망을 가로막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음
 - 결국, 대학 무상화는 대학의 주체들이 교육 활동과 학문 탐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사회 구성원들의 교양 증진, 생산성 향상, 기후 위기와 AI 등 디지털 전환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함

- 대학에서 사라져가는 학문의 다양성을 다시 확보하고 전문성을 심화시키면서 그 결과물 일부를 대학 밖 시민(성숙해 가는 고등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대졸자 시민) 대상으로 한 평생고등교육 사업 등으로 공유해 나가면 문화융성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

- 대학 무상교육 달성(무상화)은 공공성을 강화하여 출발점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됨
 -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 관련해야 가장 주목해야 할 자료는 3·1운동 이후 결성된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임.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표한 포고문에 건국강령 원문이 담겨 있는데 조소앙이 기초하였음. 건국강령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장 ‘건국’에서 민주공화국과 평등사회의 이상이 잘 드러나 있음. 조소앙은 평등을 삼균주의로 강조하였는데 정치에서의 균등, 경제에서의 균등, 교육에서의 균등이 핵심 원리였음. 정치 분야의 핵심은 인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정치적 균등의 실현에 있음. 경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가 강조됨. 교육 분야에서는 의무교육제 실시와 지방에 학교 균형 건설 등이 주요 내용임. 그 세부 내용을 옮기면 <표>와 같음

< 표36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중 교육 관련 내용

제3장 七. 건국 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여 교육정책을 시행함	
가.	교육 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아 혁명 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 일으키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둬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은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무료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복과 음식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신 제공함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치하되 최저한도 매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 1부에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 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함
사.	공사 학교는 일률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재외 교포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시행함

출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조소앙편(3)』, 1997, 188~194쪽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1권, 2005에 재수록)

- 무려 84년 전에 새 나라 건설의 강령으로 발표된 이 자료에는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교육에 관한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 교육 기회를 제 때 갖지 못한 사람을 위한 보습 교육, 옷과 음식 무료 제공, 지방에 균형적으로 학교(대학 포함) 설치, 교과서 무료 분배, 국가의 교육정책 규정과 학교에 대한 국가 감독 등이 명시되어 있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면 이 의미 있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지금이라도 따라야 할 것임. 당시 초등학교도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감안하면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무상화하는 것이 과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대학 무상화는 OECD 주요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함
-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령은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공공성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령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법제화하도록 하였음. 실제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제7조(교육재정)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제9조(학교교육)제2항은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경비부담 등)제1항은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국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하여 사립학교 역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갖추고 양양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도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무상화를 촉구하고 있음.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과 기본교육 단계에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

은 오직 학업능력으로만 판단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함.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의 2 (c)에서는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라고 함

- 한편, 유네스코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다시 생각하기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보고서(2021)에서 ‘교육’을 ‘지식공동체’로 정의하고 무상교육을 당연히 하였음. 유네스코보고서에는 교육이 공동체로 되어 있고 4가지 사항이 강조됨. 첫째, 교육은 모두의 소유이고 권리이므로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함. 둘째, 교육 기회, 내용, 방식은 평등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함. 셋째, 교육 목적은 개인의 경쟁적 성공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함. 넷째, 교육 정책 결정과 운영에는 전 사회적 참여가 중요하고 민주적이어야 함. 지식공동체에 대한 유네스코보고서의 논지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지식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참여하여 생산, 축적, 공유하므로 공동의 소유임. 둘째, ‘공동 교육과정’, ‘공유된 학습 경험’과 함께 보편적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함. 셋째, 교육 차원을 넘어 전 사회적 차원의 참여적 지식 생산, 공유, 공동 이용을 해야 함.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입장은 대학 무상화의 정당성과 타당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군정기때부터 상당 부분의 교육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강요하였음.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립대를 양산하고 그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음. 그 결과 대학을 우골탑이라 칭하기도 하였고 2010년대에는 ‘미친 등록금’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국민들의 저항으로 부족하게나마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임이 이런 악습을 답습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국격에도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반값등록금이 국가장학금 형태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사립대의 경우 국립대에 비해 등록금 자체가 매우 비싸 그 혜택이 줄어들며, 대학원생은 2025년 들어서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큼.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여전히 대학 등록금 부담을 상당히 지고 있음. 학벌체제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대학일수록 등록금이 더 비싸기도 함.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비용이 의료비와 교육비임.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등록금과 지방 출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보다 더 비싼 주거비는 출발점부터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음.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여러 교육비용을 최소화해야 출발점부터 공평해질 수 있을 것임
- 대학 무상화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공적 편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다음에 언급될 공적 효과의 전제는 대학 무상교육임

- 정치 영역에서의 편익은 다음과 같음. 엄청난 교육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원한다면 대학에 갈 수 있다면 그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복잡한 정책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 그리고 파워엘리트의 전횡을 예방하거나 맞서 싸워 바로잡을 수 있음. 최근까지 우리나라 주요 정치사에서 부당함에 맞서 앞장서 싸운 사람들 상당수가 대학생이었거나 대졸자라는 점은 틀림이 없음. 프랑스의 경우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의 확보를 중요 사안으로 인식했기 때문임
- 경제 영역에서의 편익은 다음과 같음. 대학 무상화를 통한 지방 대학 존재는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함. 지방의 2만 명 규모 1개 대학의 지역 거주 교직원과 대학생의 주거와 소비 및 대학 자체의 지역 지출을 합한 생산유발 규모는 3~4천억 원에 이름. 광역단위나 전국으로 확대해 부가가치를 따지면 더 클 것임. 지역 취업 창출에도 4~5천명 정도 기여함. 즉, 직접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유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대략적인 추이는 지방대학이 폐쇄된 곳의 지역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음
- 사회 영역에서의 편익도 있음. 고등교육은 인권 확대와 사회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 대학생의 존재는 해당 지역에서 사회문화적 활동가 생산과 다양한 계층의 활동 공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활동할 인력 양성에도 보탬이 됨. 지역의 대학생 존재는 사업장, 기술, 청년층의 수도권 편중 문제 완화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대학 무상교육이 된다면 그 사회적 혜택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된 사람이 자신에게 혜택을 준 공동체를 위해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게 할 수도 있음
- 대학 무상화는 대학 평준화(대학 교육 여건 상향평준화, 학벌체제 해소 등)와 결부시켜서 진행한다면 사회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 특히, 사립대의 경우 회계 투명성, 민주적 운영, 교육 여건 상향의 전제 없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희망하는 사립대학은 대학통합(또는 연합)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어느 정도의 공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현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 지역협력 강화 (지·산·학·연) 전은영

❖ 문제 인식 및 해결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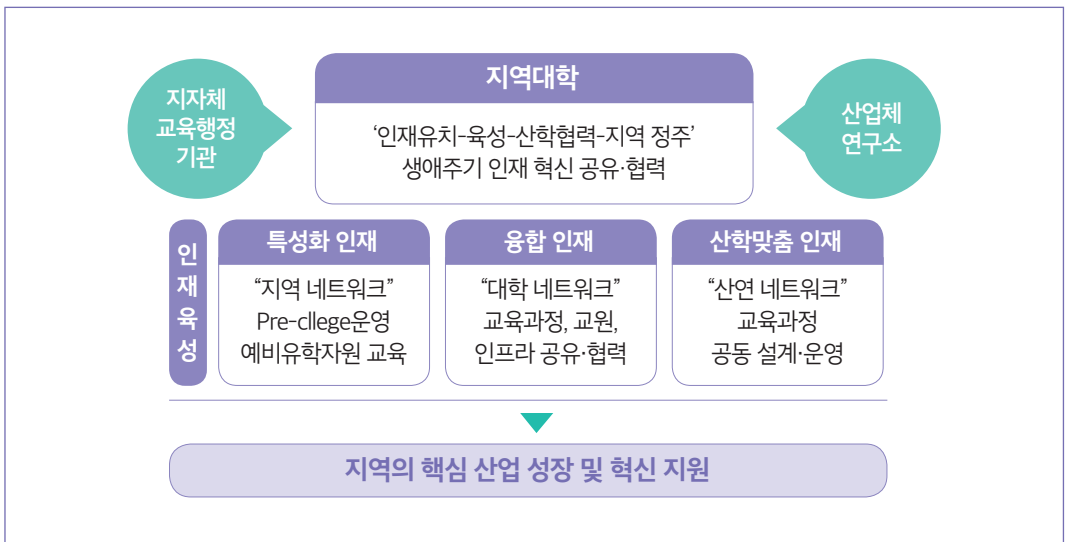
- 수도권 중심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은 지역인재 유출 및 지방 소멸 가속화
-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심화

- 지역 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지역 대학 졸업자는 지역 정주 유인 부족
- 지방대학 졸업자가 지방 산업 분야에 취업하더라도, 자녀의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은 선순환 단절의 요인 중 하나임
- 지방대학 지원 강화-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산업 연계와 병행하여 개개인 삶의 질을 고려한 생애주기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

❖ 주요 해결 방안 및 전략

-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 산업 연계 강화
 -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확대
 -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및 교육과정 운영
 -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대학 연계 프로그램(인턴십, 창업 지원 등) 활성화
 - 지·산·학·연(지자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연계를 통한 인재 육성 및 지역 산업 혁신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인재의 지역 정주 촉진
 -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및 확대
 - 지방대학 재학생 주거 지원, 장학금 신설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등

< 그림3 > 지산학연 연계·인재육성·지역 성장 및 혁신 지원



※ 출처 : 국교위 제2차 지방대학 발전방안 전문가 토론회 中 우송대 사례

● 지역 특성과 연계한 학과,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젝트 운영 고도화

지역-대학 협업체계 구축 성과 분석 및 정책 제언

- 최근 입학자원의 감소와 청년인구의 지방 이탈 등 지역의 환경 변화가 지방대학의 위기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지역 혁신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대학 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모색
 - ‘지역-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은 2003년 「지방대학 발전방안」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이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등 여러 재정지원사업에서 전략과제로 채택되었으며, 2019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이하 ‘RIS’³⁾)사업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⁴⁾
 - 2024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광역지자체(14개)에서 9개 플랫폼을 구성하여 RIS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총 300억원~480억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 내역

지자체	선정연도	핵심 분야	대학	국비 지원(억원)
광주·전남	’20년	• 에너지산업 • 미래형운송기기	전남대, 목포대 등 17개	480 내외
울산·경남	’20년	• 스마트제조 엔지니어링 • 스마트제조 ICT • 스마트공동체 • 미래모빌리티 • 저탄소 그린에너지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등 15개	480 내외
충북	’20년	• 제약바이오 • 정밀의료·기기 • 화장품·천연물	충북대, 한국교통대 등 14개	300 내외
대전·세종·충남	’21년	•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 모빌리티ICT	충남대, 공주대 등 24개	480 내외
강원	’22년	• 정밀의료 • 디지털헬스케어 • 스마트수소에너지	강원대, 연세대 미래, 강릉원주대 등 15개	300 내외
대구·경북	’22년	• 전자정보기기 • 미래차 전환부품	경북대, 영남대 등 22개	480 내외
부산	’23년	• 스마트항만물류 • 친환경 스마트선박 • 클린에너지융합부품소재	부산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등 14개	300 내외
전북	’23년	• 미래 수송기기 • 에너지 신산업 • 농생명·바이오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등 10개	300 내외
제주	’23년	• 청정바이오 • 지능형 서비스 •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제주대 등 3개	300 내외

자료: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4년 기본계획」, 2024.2., p.6.

3) 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사업은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연구소, 기업 등)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한국교육개발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진단 및 발전방안」, 2022, p.54.

- 지역의 대학-산업 연계를 위한 프로젝트에서 성과도 있었으나 보완할 점, 낮아지는 만족도 등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구조 마련 필요

지역혁신 플랫폼별 만족도

(단위: 점)

플랫폼	2021년	2022년	2023년
광주·전남	92.0	83.0	81.1
울산·경남	76.8	79.6	82.5
충북	92.5	92.0	84.8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혁신 플랫폼별 지역내 취업자 현황

(단위: 명)

플랫폼	2022년		2023년	
	목표값	실적값	목표값	실적값
광주·전남	801	422	630	1,382
울산·경남	517	520	572	323
충북	255	278	280	227
대전·세종·충남	-	-	1,411	543

주: 2022년 데이터에는 취업자 외에 창업자 포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72호_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2024.6.13.)

- 지역 중소기업 대상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지역 산학협력 전담 지원센터 설립 등 지속가능한 구조를 위한 지원 필요
 - 정부 시책이 아니더라도 대학과 지역 중소기업 등의 자발적 프로젝트 활성화 유인 필요
 - 협력적 거버넌스 및 사람 중심 네트워크: 지자체,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 활동 추진 시, 가시적 성과와 함께 ‘사람 중심’ 네트워크 및 유연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대학의 자기혁신 및 대학체제 개선
- 글로벌 인재(유학생 등) 유치 활성화 전략 필요
 - 유연한 학사 제도 개발 및 평생 교육 관점의 대학 역할 재정립
 - 종합대학의 교육 역량 전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각 대학 강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전략의 균형 있는 발전
 - 다면적 대학 평가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72호_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2024.6.13.)

- 지역민 안정적 정주를 위한 산업체 핵심 기능의 지역 정주 및 연구 역량 강화 필요
 -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정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산업체의 핵심 부서나 기술 연구 부서와 같은 고부가가치 기능이 지역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산업체 핵심 기능의 지역 정주는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
 - 산업체 전문가의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자문 체계 구축, 대학 연구-기술이전 협력 등 우수모델 확산 정책 필요
 - 연구중심대학 및 대학원생 유치 활성화로 우수 인재 유출 감소 전략 필요
- 지역의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특히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데 중요 요소임
 - 초·중·고 공교육 혁신, 공영형 영유아 돌봄 및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지방 유출 감소 유도
 - 지역 정주에는 문화 인프라가 중요하므로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문화시설, 여가 공간, 교통 인프라 확충·청년 커뮤니티 공간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장애인 정주 환경 마련 등 종합적 접근과 디자인 필요

❖ 결론

- 유·초·중·고·대학의 교육 및 평가 혁신-산업 연계-개인의 삶을 위한 인프라가 유지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관점 필요
 - 공교육에서의 단순 점수 중심 평가 → 미래 사회 요구 역량(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역량) 평가로 패러다임 전환과 평가 모델 개발 지속
 - 획일화된 경쟁 교육 → 창의성, 잠재력 중시 교육 패러다임 전환
 - 개인의 성장, 지역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
- 국가 교육 시스템의 역할
 -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국가 교육의 중장기 비전 설정과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 사회적 합의 도출,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통한 교육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해야 함

4 대학 내부 해법(특성화·활성화·경쟁력 강화)-① 김희규

❖ 대학의 여건기반 특성화 방안

- 대학의 설립유형(국립-사립), 미션(교육중심대학-연구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 지역(수도권-지방), 학제(일반대학-전문대학 등) 등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 분담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의 3단계 특성화(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중심)
 - 최상위권 대학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으로 전환(수도권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 특성화 대학, 거점 국립대 등)
 - ※ (전환 요건) 학부 정원 대폭 축소하고 대학원 정원은 대폭 확대, 선정 대상은 대학을 기본 단위로 하되, 그 대학의 모든 학과가 연구중심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음
 - 대다수 4년제 대학은 학부 교육중심 대학으로 특성화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 ※ 광역 단위의 지역-대학 혁신플랫폼 구축 및 다른 유형의 대학과 유기적 연계 강화, 독자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 과정은 유지
 - 전문대학, 폴리텍 등은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고등직업체제로 정비
 - ※ 교육중심 대학과 직업중심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
 - ※ 전문대학, 폴리텍 등을 정비하고 특성화고와 연계하여 고등직업교육 체제 구축
 - ※ 국가장학금체제 개선, 고등직업교육부터 무상교육 실시
 - 전문대학을 지역 거점 평생교육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지원하며, 신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재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하도록 함

❖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원 집중지원으로 지역 성장 동력 확보

- (지역 거점 연구중심대학원 육성) 과도하게 확장된 대학원을 대학의 미션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화된 영역을 고려하여 우수한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원을 중점 육성함
 - 지역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을 통해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들의 지식 생산, 교류·협력과 지역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 마련, 우수 인력의 지역 유입 및 경제 활성화 촉진
- (첨단분야 융합연구 허브 구축) 국가 전략기술 분야 특화대학원 육성과 지원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우주, AI·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특화대학원 확대 및 지원 고도화
 -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대상 특별 연구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도전적·혁신적 연구 인센티브 강화, 학부-대학원 연계 연구참여 확대

❖ 대학의 동반 활성화 방안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국 대학을 일정한 비율로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학부학생 정원과 관련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르는 충격에 대비하고자 함
- 대학의 미션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연구기능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부의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원 비중은 확대함
- 지역대학간 연합, 지역과 수도권 대학의 연합과 연계, 서울, 인천, 서울과 인접한 도시 대학들에 대해 적절한 정원 감축 정책을 시행하여 학생 수는 줄어도 적절한 대학의 숫자를 유지함으로써 대학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함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정원 조정

- (의견1)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전체 대학의 정원을 일정 비율로 일률 감축
- (의견2) 학생선택에 따른 대학 자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

❖ 대학 재정지원 및 자율성 확대

- 현재 GDP 대비 0.7% 수준인 정부의 고등교육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 이상으로 확대, 확보된 정부 재정은 기초학문 및 중점학문 육성,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 확충, 학문 후속세대 양성, 대학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투자
 -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경상비를 지원하고,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 지속가능한 지방대학을 지원할 (가칭)‘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별도 신설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대학을 집중 육성하도록 함
- 수익용 기본자산을 고수익의 자산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되 관련된 세금 문제는 해소 및 지원하며, 대학 유휴자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대학의 재정 자립을 지원
-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정부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거는 현실에서 정부 정책 의존도 증가하고 있음
 - 획일적인 평가 기준에 맞춰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간접적인 통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
 - ※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가산점 부여

-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구조 및 학사제도를 협의체 중심의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별·규모별·특성화별 협의체에 의한 자율 규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학과 구조개혁, 교육과정 혁신, 학생 선택권 확대 등 근본적인 대학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둠

❖ 거점 기반 경쟁력 확보 방안

- 기초학문분야의 지원체제 구축
 - 기초학문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기초학문 분야의 대학·산업체·연구소 간의 네트워크 고도화로 인재 성장경로를 다변화하고 체계적으로 구축
- 우수연구자에 대한 보상체제 확립
 -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합리적인 성과 보상체제를 마련하여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연구 지원프로그램, 연구비 증액 등 지속적인 연구와 도전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보상기제 확립
- 광역단위 거점국립대학
 - 광역자체단체의 거점국립대학 중심으로 국립대학과의 연계·통합을 추진하고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점대학이 되도록 지원함
 - 경쟁력 있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생력은 다소 부족한 사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 지역캠퍼스 형태로 통합하여 지역주민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거점대학원 육성
 - 오늘날 과도하게 확장된 대학원을 대학의 미션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화된 영역을 고려하여 우수한 지역대학원을 중점 육성함
 - 지역 거점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전일제 (예비)박사과정생 중 연구 역량이 뛰어나고 유망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위 취득 시까지 생활지, 등록금, 연구비를 총액(lump-sum)으로 국가가 직접 지급하여 안정적인 연구 몰입을 지원함
- 해외 우수인재 유치
 -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제정함
 - ※ <참고> 현행법상 분교는 설치 가능하나 캠퍼스 설치는 어려움

- 해외 캠퍼스 1년 수학 후 국내 캠퍼스 3년 이수, 즉 3+1 이수, 즉 3+1(혹은 2+2)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과 순환을 장려함
- 우수 인재의 장기적 국내 정주를 독려하기 위한 학업(학·석·박) 이후의 노동시장 진출, 지역 정주에 이르는 비자 연계(one-pass) 제도를 적극 확대하고 재학 중 취업활동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 국내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를 통한 유학-취업의 선순환 과정을 도모함
- 저출생,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학생 증가로 인한 각종 갈등을 뛰어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유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함

❖ 특성화

- (기능별 특성화) 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중심, 평생교육대학
- (분야별 특성화) 전공 영역별 특성화
- (운영별 특성화) 특수목적 추구

4 대학 내부 해법(특성화·활성화·경쟁력 강화)-② 지별하

❖ 서론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고착화된 대학 서열화
- 이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을 안기고,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저해
- 국가교육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열화가 공고하다는 데 이견 없으며, 기존 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다수
-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우수한 인력이 여러 대학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핵심 시사점에 초점

❖ 대학 서열화의 현황 및 문제점

- 대학 서열화의 현황
 - 학력고사 도입(1981년) 이후 서열화가 본격적으로 고착화
 - 최상위 3개 대학의 서열은 매우 공고하게 유지

- 지역대학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
- 인문계열이 서열화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음
- 최근에는 전공 서열이 대학 서열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 증가

● 서열화의 문제점

- 고교 교육과정 운영 침해 및 왜곡
- 학생들의 진로 선택 제한
- 대학 간 교육의 질 격차 심화
- 지역 간 교육 불균형 심화
- 대학의 특성화 및 다양성 저해

❖ 대학 서열화 완화 전략

● 특성화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

- (융합 중심 교육과정 강화) 전공 간 경계를 넘는 융합 교육과정 개발, 융합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확대, 문제 해결 중심의 PBL(Problem-Based Learning) 확대
- (지역 산업 연계 특성화 교육)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중심 교육
- (글로벌 특성화 교육) 국제 복수학위 프로그램 확대, 글로벌 현장학습 및 해외 인턴십 강화, 국제 협력 연구 및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특성화 분야 중심의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공동 R&D 및 기술이전 활성화
-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프로젝트 운영, 지역 주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학-지역 상생 모델 구축
- (창업 및 혁신 생태계 조성) 학생 창업 지원 시스템 강화, 창업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기업 및 소셜 벤처 육성

●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대학 간 협력 시스템)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원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공동 연구 및 시설 공유
- (국내외 대학 간 협력 강화) 국내외 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 프로그램, 교원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확대,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및 학술 교류 활성화
- (산업-학문 분야별 대학 연합체 구성) 특성화 분야별 대학 연합 구성, 공동 교육 표준 및 인증 시스템 개발, 자원 공유 및 상호 보완적 발전 모델 구축

❖ 지방대학의 성공적 특성화 사례

- 지방대학의 차별화된 강점 사례
 - (특성화된 교육과정) UNIST, 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융합교육 사례
 - (지역산업 연계) 전북대학교의 농생명 및 탄소산업 특성화, 경상대학교의 항공우주산업 특성화
 - (가치 중심 교육) 한동대학교의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
 - (문제 해결 중심 교육) POSTECH, DGIST 등의 연구중심 문제해결형 교육
 -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울산대학교의 글로벌 산학협력, 한동대학교의 글로벌로테이션프로그램, HIFA(Handong International Freshman Academy) 등
- 지방대학의 특성화 성공 분야
 - (융합형 인재 양성) UNIST의 융합전공 트랙, GIST의 학제간 융합연구, 한동대학교의 신입생 무전공 무학부 입학 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
 -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부경대학교의 해양산업 인재양성, 순천대학교의 생명산업 특성화
 - (사회혁신 분야) 지방 소재 대학들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 (공학-인문학 융합 교육) KAIST의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POSTECH의 인문사회학부
 -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역거점국립대학들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례

❖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해외 대학 사례

-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s) 사례
 - 윌리엄스 칼리지, 애머스트 칼리지 등은 소규모 학생 수, 낮은 교수-학생 비율, 토론 중심 수업 특징
 - 연구보다 학부 교육의 질에 초점, 교수진이 교육에 더 많은 시간 투자
 - 다양한 학문 분야 경험 기회 제공, 비판적 사고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중점
 - 이러한 특성화로 명문 종합대학과 직접 경쟁 회피하며 뚜렷한 위치 확보
- 독일의 응용과학대학(Universities of Applied Sciences) 사례
 - 함부르크 응용과학대학, 뮌헨 응용과학대학 등은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 실용적 교육 중심
 - 전통적 종합대학과 교육 방식, 연구 성격, 학위 프로그램 등에서 차별화
 - 산업체 협력 프로젝트, 현장 실습, 인턴십 등을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
 - 이러한 차별화 전략으로 산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 양성에 기여

- 핀란드의 알토 대학교(Aalto University) 사례
 - 헬싱키 공과대학, 경제대학, 예술디자인대학 통합으로 설립(2010년)
 - 공학, 경영, 디자인 분야의 융합을 통한 혁신 추구
 - 학제 간 연구와 교육 장려, 다양한 분야 전문지식 결합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
 - ‘Design Factory’, ‘Startup Sauna’ 등 혁신 플랫폼으로 학생 창업과 혁신 지원
- 일본의 국제교양대학(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사례
 - 소규모 공립대학이지만 국제화와 영어 교육에 특화된 전략으로 독특한 위치 확보
 -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 1년간 해외 유학 의무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초점
 - 리버럴 아츠 교육 중심으로 높은 취업률과 학생 만족도 달성
 - 일본 기업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적 감각과 영어 능력 갖춘 인재 수요 증가로 효과적인 전략
- 해외 대학 사례의 시사점
 - 성공적 대학 특성화의 핵심은 대학 강점 명확히 인식, 차별화된 교육 모델 개발
 -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국제화, 융합 교육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 전략
 - 국내 대학도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켜 고등교육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 확보 가능

❖ 결론

- 대학 서열화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
- 각 대학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특성화하고, 우수한 인력이 다양한 대학에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지방대학의 특성화 사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대학별 고유의 강점과 차별화된 가치 창출 필요
- 위와 같은 특성화 전략은 단순히 개별 대학의 발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에 기여
- 대학 서열에 따른 획일적 선택이 아닌,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대학 간 과도한 서열 경쟁보다는 각 대학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화된 교육 모델로 고등교육 발전 도모

4 대학 내부 해법(특성화·활성화·경쟁력 강화)-③ 양영유

❖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조건

- (첫 번째 조건) 대학의 치열한 셀프 혁신
 - 저출생 시대를 맞아 대학이 학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선택해 진학하는 학생 우위 시대로 진입함
 -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을 OECD 수준으로 확충하고 각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해도 대학이 현재와 같은 체제를 고수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움
 - 전국의 대학은 입학 성적, 교육 여건, 지리적 여건, 재정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별 킬러 콘텐츠, 즉 대표 전공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내는 혁신에 나서야 함
 - 킬러 콘텐츠는 대학명이 아니라 전공명을 대면 대학이 떠오르게 하는 슈퍼 특성화를 의미. 백화점식 전공 운영이 아닌 명품 중심의 전공 운영으로 전공 재구조화, 학사 재구조화, 대학 재구조화에 나서야 함
 - 수학과에 수능 9등급, 영문학과에 영어 수능 5등급(절대평가 최하 등급)이 지원해도 합격시키는 일부 대학의 '정원 충원 비상' 사태는 곧 '대학의 생명 단축' 사태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함.
 - 전공 재구조화를 통해 대학을 통째로 바꾼다는 절박함이 필요함. 특정 전공을 공부하려면 지방의 특정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브랜드화로 승부를 걸어야 함
 - 순수 학문은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응용학문은 사립대 중심으로 이원화는 전공 재구조화를 통해 대학명이 아닌 전공별 특성화 전략이 필요
 -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학의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함. 4년제 대학이 전문대의 전공을 카피하고 전문대화하는 현상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자발적 정비책이 전제되어야 함
 - 셀프 혁신은 대학 거버넌스와 학사 운영의 파괴적 혁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교직원 연봉제 도입, 테뉴어 교수 주기별 재평가 등 대학 운영의 전면 개편을 통해 자율과 경쟁, 평가의 엄정성을 재정립해야 함
 - 교육과 연구는 국립대, 사립대, 지역별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는 중장기적인 개편으로 각 대학의 경쟁력과 특성화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 (두 번째 조건) 1도 1 국립대와 사립대 거품 걷어내기
 - 전국 국립대는 같은 권역 내에 있는 거점 및 군소 국립대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1 광역시도 1 국립대 체제로 개편해야 함
 - 충남과 대전의 예를 보면, 충남대와 한밭대, 공주대는 같은 권역에 있으나 세 국립대의 시너지가 부족함

- 자동차로 10분, 30분 거리의 각 대학은 각각의 대학에 영문과, 중문과, 경영학과 등을 비롯해 중복 전공을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동일 권역 국립대임에도 전공이 겹치고 경쟁력도 정체 상태임. 권역별 국립대를 통합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최고 명문 대학으로 키우는 전면 개혁이 필요함
- 대학 설립준칙주의 시대에 양적으로 팽창한 사립대는 저출생 시대에 존재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 '거품'을 걷어내 대학별로 특성화 전공 위주로 전면 다이어트가 필요. 창학이념을 최대한 존중하되 미래 비전이 불명확한 전공을 대수술해야 함
- (세 번째 조건) 지역과 대학의 공진화(co evolution)
 -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과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한시적 재정사업이라는 한계점을 노출
 - 특히 각 지자체는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데다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라이즈 사업 같은 재정 사업의 주체가 됨. 선출직인 단체장의 입김과 의도에 따라 사업이 왜곡될 우려는 여전히 상존
 - 자치단체는 그간 대학에 따뜻한 난로가 되어 준 적이 없으며, 대학은 자신의 등지가 있는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을 소홀히 해왔음
 - 따라서 대학과 자치단체가 공진화(共進化)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절박함. 그 방법은 커뮤니티(Community)와 대학(University)을 융합한 커뮤버시티(Communiversality)로 탈바꿈하는 것임
 - 커뮤버시티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의 교육·문화·예술·산학·스포츠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로 미국의 대학이 지역의 메카가 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은 방학 중 평균 4개월 동안 강의실이 비어 있음. 이런 시설을 문화 아카데미,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해 저출생 고령화 시대 지역의 메카로 만들어야 함
 - 결국 자치단체의 발상 전환, 대학의 지식 공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같이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5 대학입시제도 개편-① 정일화

-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의 격차를 크게 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함
- 교육적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대입제도는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교육적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는 다면적 정책 영역임

- 대입제도에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과 사회적 계층 이동성 강화라는 사회적 책무 간 균형이 내재됨
- 대학입시제도는 사회적 계층화를 촉진하거나 완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우리 사회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이 보장된다는 실질적인 관계 때문에 대학입시가 과열되고, 입시가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평가가 교육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학생들을 한 줄로 줄을 세워 놓고 성적순으로 서열화된 대학에 배정하는 것에 불과한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은 국가가 주관하는 고부담 평가로서,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과 학문을 서열화하고 있음
- 대학입시제도가 지니는 파급력으로 인해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입시제도 문제를 지나칠 수 없음
- 대학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이 심화되는 불평등과 불균형의 축소 내지는 해소에만 머문다면, 학생마다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산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기여를 도모하는 교육의 근본 목적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길 수 있음
-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 제한받지 않고 교육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낙오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성공하게 이끄는 교육과 교육제도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과 직결됨
- 모든 학생이 뒤처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한다는 교육의 책무와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취업에 유리한 대학의 서열이 아닌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진학을 선택하고, 대학마다 특색과 장점을 가지고 발전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대학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챙겨야 할 것임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탐색할 때 역시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럽 주요국 사례의 참고가 필요함

- 대학의 서열과 경쟁을 완화하는 기제로써 대입제도를 고려함.
- 비영리기구가 운영하는 대입포털에서 대입을 관리함.
- 단 한 번의 객관식 시험으로 득점 순위를 정해 대학 진학이 정하지 않음.
- 대학진학의 기준과 진로에 따라 내신성적으로 반영하는 교과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음.
- 직업 자격 또는 직업 경험으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음
- 미진학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교육과정을 제공함.
- 졸업자격 취득을 하면 재응시를 할 수 없음.
- 학생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별보다는 국가 지원의 관점에서 대학 진학제도를 운영함.
-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대학 진학이 가능하고, 일부 고급고등교육기관은 전공별로 특성화되어 있음.
- 대학은 해당 지역 거주의 학생을 선발 및 학비 측면에서 우대함.

5 대학입시제도 개편-② 하병수

❖ 대입제도 개혁방향

- 입시 경쟁이 교육을 전일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쟁의 강도 대폭 완화
 -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대학 교육 대중화 보편화 단계, 국가의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보장
 - 논·서술형 시험의 형태 전환, 학교의 수업 혁신, 사유하는 인간으로 성장
- 대입 제도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대학 서열 체제 대폭 해소
 -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대학의 질 올리기
 - ※ 네트워크 된 상위권 대학의 공동입시를 통해 상위권 입시 경쟁 해소, 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 개설 (공동 전공 과정 개설)
 - 공동학사, 공동입시, 공동학위, 학생이동, 교원이동을 통한 수도권-지역간 격차 해소

❖ 대학체제 개편방안

- 대학입학 자격고사 방안
 - 대입 자격고사 도입 목적
 - ①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여 공교육정상화에 기여

② 대학통합네트워크와 지역연합대학 등 대학체제 개편을 통한 대학서열화 해소

③ 사교육 등 부모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교육 불평등 해소

- 기본 유형 : 대입자격고사는 학교내신과 국가수준의 시험의 결합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유형1)** 대입자격고사(논술형)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방안
- **(유형2)** 고교 내신성적(절대평가)의 도달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고등학교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 담보방안 함께 마련
※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프랑스는 바칼로레아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교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였음. 미국의 대학들은 SAT, ACT시험을 요구하지 않고 선택으로 전환하였음. 美 캘리포니아의 경우 학교 내신으로 입학 자격 부여하고 있음
- **(유형3)** 고교 내신 성적과 대입자격시험 두 가지 모두의 통과 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 표37 > 각국의 대입제도 비교

	내신	국가수준 표준화 시험	비고
프랑스	X	○	바칼로레아(합격률 88%)
독일	○	○	아비투어
캘리포니아(미국)	○	X	(UC 1/8, CSU 1/3)
코로나 팬데믹	○	X	영국, 프랑스 등

- 대입 자격고사, 내신과 수능 5단계 절대평가 실시

- ① 학생들의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적인 교육활동이 가능
- ② 내신 평가 과목이 30~40개로 변별력 확보가 가능
- ③ 수능의 경우도 절대평가로 전환한 후, 1·2등급 평균 25%를 유지하여 영어 과목의 변별력을 확보해옴

< 표38 >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급별 비율

(단위 : %)

등급	2021	2022	2023	2024	2025
1	12.66	6.25	7.83	4.71	6.22
2	16.48	21.64	18.67	18.17	16.35
3	19.74	25.16	21.75	23.96	21.37

참고자료

- 수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
⇒ 현행보다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 : 53.7%)
- 교육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시행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 수능시험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관련 찬성 56.2%로 절대평가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출처: 김학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 대전시의회·대전교육연구소.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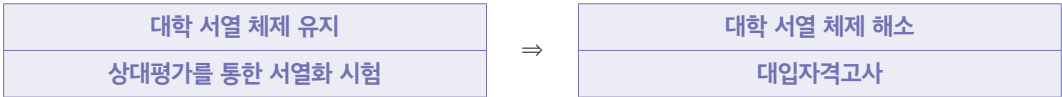
- 수시·정시 통합

- ①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 정상화
- ② 절대평가가 실시될 경우, 수능만으로 변별이 어려운 대학과 학과도 있을 수 있어, 수능과 내신 5단계 절대평가 합산 전형으로 일원화

- 학생부 비교과, 논술 전형 폐지

- ① 학생 부담 줄임
- ② 비교육적, 소모적인 학생부 기록 경쟁 해소
- ③ 비교과영역은 대학수학능력 검증이라는 취지에 어울리지 않고,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가중

● 공동 입시방안 - 대학서열화 해소 추진 경로와 대입제도 개편의 결합



대학 유형	대학네트워크 대학	지역연합대학 일반대학	직업대학
우선 입학 자격 부여 기준	1등급	1~3등급	1~4등급

- 네트워크 대학은 5등급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한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하여 공동선발체제를 구축
- 초기 대학네트워크의 총정원은 대학진학 예정자 수의 20% 선으로 설정
※ 입학 자격 부여 기준으로 1등급 20%, 2등급 40%로 설정
- 네트워크 대학은 공동선발 뿐만 아니라 대학 간의 학점 교류와 융복합 전공코스 공동 운영·공동학위·교원인사교류로 확대
- 대입은 수시·정시 통합 가-나-다 전형으로 운영
※ 가전형은 대학네트워크 대학, 나전형은 지역연합대학과 일반대학, 다전형은 직업대학
- 대입전형자료는 내신과 수능등급 함께 반영(일부에서 학생부 자료와 면접 운영)
- 전형별 6개 학교 지원, 앞 전형 합격시 뒤 전형 지원 불가, 미충원시 편입으로 이월
-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들은 동일 등급의 학생 선발로 고착화된 입학성적 중심의 대학 서열화 체제와 결별

참고자료

- 이러한 대학체제와 학생선발 방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UC(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중심대학), CSU(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육중심대학), CCC(캘리포니아커뮤니티 칼리지. 직업대학)의 3개의 체제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UC는 ELC(입학보장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의 경우 해당년도 고등학교졸업자 중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8분의 1이내(상위12.5%)인 자에게 입학을 보장하였다. CSU는 해당년도 고등학교졸업자중 고등학교성적이 상위 3분의 1이내(상위 33.3%)인 자의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LC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9개 UC 캠퍼스 중 최소 한군데 입학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다.있음

출처: 홍성호,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등교육체제 구축방안 연구', 2020

❖ 대학서열화 해소 경로

● 경로와 전망

현행	⇒	2030년 대 초반~	2030년대 후반~
대학서열체제		낮은 단계 대학네트워크	높은 단계 대학네트워크
상대평가 9등급제		대입자격고사(5등급)	대입자격고사(2등급)

- 현행의 대학서열체제와 경쟁적 입시제도는 '낮은 단계 대학네트워크-5등급 절대평가'를 거쳐 '높은 단계 대학네트워크-2등급 대입자격고사'로 완성되면서 해소됨
- 시기적으로 보면 낮은 단계의 대학체제 개편은 4년 예고제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에 확정하여 2030년 초중반 시행하고, 높은 단계의 대학체제 개편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2036~2045)을 계기로 시행

● 2단계 대입자격고사체제로 완성

대학 유형	대학	직업대학
우선 입학 자격 부여 기준	3등급	4등급

- 대학네트워크 대학의 동질성이 높아지게 되면 2단계 대입자격고사체제로 전환
- 우리나라의 대학서열체제 해소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방식(3단계)를 거쳐 독일식(2단계)으로 이행하는 경로

Ⅶ. 정책 제언 **박순준**

❖ 대학의 체제 개편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

-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추진
 - 서울대 일극 체제는 빈곤한 시절 정부가 채택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서울대에 대한 재원 집중이 완화되긴 하였지만 서울대는 여전히 압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서울대는 이러한 압도적인 물적 투자를 바탕으로 지난 70여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인적·사회적 자산이 더해져 오늘날의 위상을 형성할 수 있었음
 - 서울 사립대학들 다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방대학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지방의 청년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불균형한 대학 생태계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담론이 제기되었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채택됨
- 지역 중심으로 ‘좋은 대학’을 다수 만들어 학생들의 선택 공간 확장
 -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우수한 사립대학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에 속할 것이라 짐작하겠지만 이런 대학들을 지역에 ‘여럿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좋은 대학’은 학생이 ‘좋은 시설과 교육 환경’에서 ‘좋은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자라나 지역 공동체를 ‘좋은 사회’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임
 - 또한 ‘좋은 교수’가 연구자로서 ‘좋은 연구 환경’에서 열심히 연구하여 우리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임
 - ‘좋은 시설과 교육·연구 환경’은 대학 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좋은 교수’의 채용 또한 대학 자체의 역량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지원 아래 이런 조건들을 겸비하는 것이 대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작점이라 하겠음
-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은 재정 규모의 영세성, 대학 운영의 비공개성과 경직성 등으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발전이 지체되고 있으며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문대학 역시 마찬가지 상황임
 - 전문대학을 포함한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운영이 개방적으로 혁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 영역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함

- 사립대학이 공공성 확보를 바탕으로 민간 재정과 국가 재정을 확충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의 발전이 가능해지고 전체적으로 대학의 서열화가 완화될 것임

❖ 다각적 재정 지원으로 대학 서열화 완화

- 고등교육재정지원의 재구조화
 - 현재 국가 재정 여건으로는 재정지원을 당장에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의 재정 지원방식을 재구조화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증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그동안 대학들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의 갖은 사업들을 수주하는 보고서를 쓰느라 교육이 황폐화된 것을 교육 당국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방안을 제도화해야 함
 - 즉, 특정목적사업 기반의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인건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 지원 방식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학재정지원의 체계화를 위한 라이즈(RISE) 체계의 재조정
 - 현재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지역 배분과 지자체에서의 대학 배분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지역의 일부 인사들만 인지할 정도로 배분의 기준과 규모 및 사업 방향 등이 불투명함
 -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행하려면 거점국립대학만이 아니라 국가중심국립대학과 지역의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
 - 우선은 라이즈 체계를 초광역 단위로 묶어 재정지원의 거버넌스를 단순하게 만들고 지역별로 이를 전담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 기제를 통해 대학별 사정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학별 약점을 보완·개선하는 대학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야 함
- 국가의 대학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
 - 현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연장하는 방안이 시급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난 십수 년간 여·야가 발의해 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필요함
 - 그동안 사립대학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좋지 않아 경상운영비를 보조해 달라는 목소리는 학교법인 측의 일방적 요구로만 제기되어 왔음
 - 다만 국가의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수인데, 자율성을 내세우는 학교법인이 ‘(국가가)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요구를 제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음

- 심지어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학진흥조성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주장하는 「사립대학법」의 제정도 받아들일 듯한 태도를 보임
- 불균형한 대학 생태계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전향적인 검토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절실함

❖ 지·산·학·연 협력체제 구축과 특성화로 대학 서열화 완화

- 지·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한 지방대학 발전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만으로 지역 발전이 불가능한 것처럼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한 지방대학의 발전 역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지역의 산업체, 지역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지방대학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함
 - 지·산·학·연 협력체제는 현재의 RISE 체제와 글로벌 정책을 정비하여 초광역 단위로 설치하고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지역과 산업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전문대학이 역할 분담과 연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지역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대학의 특성화 추진
 - 지방대학은 종래의 방만한 백화점식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화된 발전 방향과 맞추어 특성화된 대학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특성화된 대학이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특성화의 성과가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으로 확인되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임

VIII. 결론 및 후속 과제

대학의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24.5월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총장, 중등학교 교사, 학부모, 언론인, 분야별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해왔다. '25년 5월까지 일년동안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학 격차로 인한 한국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12차례의 회의는 발제와 자유 논의로 구성되었다. 대학 교육의 격차로 인한 문제점, 대학재정 확충 등 고등교육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주제를 선정하여 발제하였다. 발제 이후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이어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로 발제 내용과 이에 대한 위원별 의견 등을 종합하여 대학 격차와 관련한 고등교육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교육 고착화와 지역대학의 경영난, 서울과 지방대학 사이의 격차, 학벌주의의 심화,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 등의 문제점을 경제적, 법적·교육적·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논의 결과, 대학교육의 격차로 인한 사교육 과열, 입시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교육 정상화 위주의 접근이 아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대를 통한 대학별 특성화, 지역과 연계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우선, 대학별 특성화와 관련해서는 학문·연구 중심대학과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 구분하여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이 광역자치단체의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의 특성과 맞는 특성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원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확장된 대학원을 특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교육 등 지역대학의 특성화 성공사례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대학의 특성화 사례를 확대하고 대학별 고유의 강점과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때, 우수한 인력이 서열화된 대입 성적순이 아니라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대학에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투자를 OECD 평균수준인 1.0% 이상(또는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20,499\$ 수준) 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보호가 필요하다.

대학격차로 인한 문제는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및 고용, 재정정책을 아울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의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과 맞물려 심각성과 시급성이 커지고 있는 사항이다. 동 보고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학교육의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방대학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문제 인식과 방향 제시에서 나아가 향후 고등교육체제 및 재정지원 확보방안,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주제별로 보다 심층적인 후속 논의가 이어져 구체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